

기초연금 긴급 정책토론회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일시 | 2014년 3월 12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당 보건복지상임위원회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프로그램

10:00 사회	정용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10:10 인사말1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인사말2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인사말3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10:30발표	정부 기초연금안의 세 가지 불편한 진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11:00 지정토론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주 민주당 국회의원
	김용익 민주당 국회의원
	남윤인순 민주당 국회의원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
12:00 종합토론	
12:20 폐회	

목차

인사말1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	04
인사말2 장병완(민주당 정책위의장)	06
인사말3 오제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08
인사말4 정용건(연금행동 집행위원장)	11
발제1 정부 기초연금안의 세 가지 불편한 진실 / 오건호	12
토론1 토론문 / 김경자	35
토론2 국민연금에 연계한 기초연금법안, 국민들은 분노한다. / 김남희	39
토론3 기초연금의 불편한 진실 토론문 / 김연명	43
토론4 국민연금보장성 및 노후소득보장체계 악화를 유도하는 박근혜 기초 연금안 / 제갈현숙	47
토론5 정부여당이 제안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4가지 질문 / 김용익	55
토론6 청장년층 손해 보는 기초연금 / 남윤인순	65
토론7 토론문 / 이언주	75

[인사말 1]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원내대표 전병헌입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계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어르신들 노후생활에 보탬이 되는 기초연금 도입에 기뻐해야 하지만, 요즘 오히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벌써 끝났어야 하는데, 아직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말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약을 파기하고 어르신들을 기만한 것만으로는 부족한가 봅니다. ‘기초연금 7월 지급이 물 건너 갔네’ 운운하며 이제는 국민과 어르신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국민과 어르신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부여당은 정말로 기초연금이 물 건너가길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 기초연금법은 수많은 전문가들과 사회각계 대표들이, 심지어 정부측 인사마저도 반대한 것입니다. 문제투성이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문제를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어거지 옹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기초연금법은 성실한 국민연금가입자를 역차별하며, 쥐꼬리만한 연금으로 어르신들을 차등하고, 미래로 갈수록 연금혜택을 줄이는 악법입니다. 국민연금가입자를 울리고, 어르신들을 기만하며, 미래세대를 포기하는 법입니다. 절대 통과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 지급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면 80%까지는 지키라고 했고, 정 그것도 어렵다면 최소한 70%까지는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70% 20만원은 이미 현행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이상 양보한다는 것은 현행법보다도 후퇴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 이상의 양보는 절대 없습니다.

70% 어르신에게 20만원을 드리기 위한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새로 법

을 만들 필요 없이 현행법의 숫자 하나만 바꾸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별도의 준비 없이 법만 개정하면 당장이라도 20만원씩 드릴 수 있습니다.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처럼 손쉬운 대안이 눈앞에 있는데도 억지 옹고집을 부리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국민과 어르신들께 알려야 합니다. 정부 기초연금법에 어떠한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지 알려야 합니다. 당장 시행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는 것도 알려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그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정부법의 문제와 합리적 대안의 존재를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거짓말에 거짓말을 일삼는 행태를 국민들께서 심판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인사말 2]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장병완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의 문제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이번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습니다.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주신 분들과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고집하는 기초연금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안이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역차별하는 것이라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을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불이익을 주는 법이 세상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안은 우리나라 어르신들을 영구히 빈곤상태에 방치하는 것이라는 점도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OECD에서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적어도 40%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향후 50~60년이 흘러도 실질 소득대체율이 20% 초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온전히 실현되어 소득대체율 10% 수준의 기초연금이 도입되어도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30% 초반에 그치게 됩니다. 이처럼 노후생활을 위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적정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데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혜택을 향후 지속적으로 줄여가겠다는 방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 어르신들을 영구히 빈곤상태에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후세대의 과도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신들의 기초연금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담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그들이 받을 연금을 반토막 내려하는 것이 후세대를 위한 것일까요? 정부안은 후세대, 즉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오히려 이중 피해를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안은 현재의 청장년층이 노인세대에 대한 기초연금을 책임지지만, 정작 그들이 노인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으로 깎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국민연금연계 없이 70% 어르신에게 20만원을 균등하게 지급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거덜 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안과 정부·새누리당안은 재정부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노인인구가 절정이 되는 2060년의 경우에조차 GDP의 2.4%(정부·새누리당안)와 2.8%(민주당안)로 재정부담 차이가 0.4%에 불과합니다. 0.4% 때문에 한국경제가 파탄 나겠습니까? 정부·새누리당안대로 하면 경제에 아무 문제가 없고 민주당안대로 하면 경제가 파탄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법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자세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놀라울 따름입니다.

부디 오늘 토론회가 기폭제가 되어 앞으로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의 문제가 속속들이 파헤쳐지길 기대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3]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오제세 의원입니다.

기초연금 긴급정책토론회 개최를 준비해 주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간사님을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민주당 정책위원회,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발제를 맡아 주신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님과 토론에 참여해 주신 김정자 민주노총 부위원장님, 김남희 변호사님, 김연명 교수님, 제갈현숙 연구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가장 빠른 기간에 눈부시게 성장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에 가입한 나라로 국민 1인당 소득이 2만 4000불에 이르는 부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비정규직 비율 1위, 초저출산 국가진입 등의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는 성공했지만, 국민들은 불행’한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경제성장 속도만큼 이나 가장 빠른 시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소득불평등 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근 스스로 생을 마감한 송파구 세 모녀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최근 들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빈곤층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리사회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의 공공부조와 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이 부실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은 국민이 2명 중 1명꼴이고, OECD국가에서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생각했을 때 오늘 논의되는 기초연금의 나아갈 방향은 명확합니다. 무상보육처럼 모든 노인들에게 차등 없이, 좀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막중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국가재정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의 후퇴를 불러온 것은 물론 부실한 기초연금안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하여 전체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면 7조 원이 추가되어 약 13조 원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70% 노인들에게만 지급하면 추가되는 재정은 이보다 적습니다. 정부는 이 예산이 미래에 수십조 원으로 늘어나 재정적으로 지속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반대했고,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3조 원은 우리나라 GDP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공적연금에 지출하는 예산은 GDP 대비 2.1%로 선진국 중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이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이유는 이렇게 매우 적은 재정을 지출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자료에 의하면 2050년 1900만 명 노인 전체에게 2배로 인상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면 GDP의 약 4.3%, 국민연금 지출액은 GDP의 5.5%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합하면 2050년에 최대 우리나라는 GDP 대비 9.8% 예산을 연금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유럽 국가들은 노인인구가 평균 15%일 때 연금을 GDP 대비 11%를 지출해 왔습니다. 2050년 유럽 국가들의 노인인구는 평균 25% 정도가 되는데 이때 지출되는 연금총액은 GDP의 약 13%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액수이며 유럽 국가들은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노인인구가 40%가 되는 2050년에 연금으로 GDP의 9.8%를 지출한다는 것은 유럽 국가들이 2000년대 초반에 지출한 수준의 연금보다도 적

게 쓰는 것이며, 2050년이 되어도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의 지급 액수는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국가재정의 불안을 과장되게 조성할 것이 아니라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이 너무 적어 노인빈곤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걱정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번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노인의 일로 치부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국민 누구나 노인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공약이 이행됐다면 모든 국민은 노인이 되어 기초연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노인복지는 곧 국민 모두를 위한, 국민 모두의 복지라는 것을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민주당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등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지금의 노력이 노인복지를 발전시키고 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드는 밑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민 모두에 의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4] 정용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복지국가의 봄은 언제나 오겠습니다.

2012년 대선의 가장 성공한 공약은 당시 박근혜 후보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였습니다.

이제 기초연금지급 시간은 올 7월로 다가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훨씬 더 나쁘게, 차별적으로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개악된채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송과 세 모녀의 죽음에서 보듯이 국가의 복지지원은 보편적이지 않으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고 이미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평균의 4배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노인빈곤을 해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천명만대로 부자노인의 혜택은 세금을 통해 충분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국민연금을 성실히 장기납부해온 연금가입자를 차별하고 이는 가뜩이나 취약한 공적연금의 기반을 붕괴시킬 것입니다. 또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가재정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우려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부자의 성역을 보호하기 위한 비겁한 꼼수입니다. 아시는 대로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충당됨으로 현재든 미래든 부자들의 주머니에서 더 많은 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토론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나쁜 기초연금법안의 문제점을 통렬히 밝히고자 합니다.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신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감사드리며 발제해주신 오건호박사님과 토론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담대한 토론이되게 참여해주신 민주당 보건복지상임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기초연금안의 세 가지 불편한 진실

- 애초 차등지급, 물가연동 독소조항, 재원마련 가능성 -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현재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민주당,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월까지 기초연금법안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7월부터 20만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사실상 국민을 협박하며 졸속 통과를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일정을 빙미로 누더기와 꼼수로 범벅된 기초연금을 통과시킬수는 없다(논의가 늦어지는 경우 소급 지급 가능).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은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에 집중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왔고 국회에서도 논란을 벌이고 있다. 국민연금 불신을 조장하는 연계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 방안과 더불어 정부의 기초연금안에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번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불편한 진실 3개’가 담겨 있다. 이 발표문은 이 세가지 진실을 다룬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애초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공약을 만들었음에도 동일액을 지급할 것처럼 유권자들에게 허위로 공약을 알렸다. 세수가 부족해 공약을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당선되려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벌인 것이다.

둘째, 정부안은 기초연금 결정방식을 소득연동에서 사실상 물가연동으로 바꿔 미래 기초연금액을 대폭 하향시킨다. 삭감 규모로 본다면 국민연금 연계에 따른 감액보다 물가연동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독소조항이다. 기초연금액은 8년 후인 2022년에 현행 기초노령연금(단계별 인상 가정)에 비해서도 작아지고, 2028년 이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현재가격으로 20만원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수 있다.

셋째, 정부는 보편주의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미래 재정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 주장한다. 이는 과도한 예단이다. 지금의 빈약한 세입을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보편주의 기초연금으로 가야하며, 사회적 합의만 된다면 우리사회는 그만한 재정 여력을 지니고 있다.

1. 불편한 진실 One : 애초부터 기초연금 공약은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 이었다.

1. 국민들은 ‘모두에게 20만원 지급’ 을 믿고 투표했다

국민들은 박근혜후보의 기초연금 공약이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투표를 했다. 당선 이후에는 복지재정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 공약 내용을 국민연금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수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주위 어르신, 이웃 주민을 만나면 모두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언론 역시 같은 기조로 보도해 왔다.

이런 경우 박근혜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 차등지급안은 세수 부족에 따른 ‘공약 수정’에 해당한다. 역대 정권들이 공약을 수정, 축소해 왔는데, 왜 굳이 박근혜정부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 하냐는 변명이 보수언론에서 나오기까지 한다. 모두 애초 공약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야기들이다.

2. 복지부장관, 새누리당 실세들이 털어놓는 진실: 애초 ‘차등지급’ 이었다!

그러나 기초연금 공약의 실체는 이와 다르다. 놀랍게도 처음부터 기초연금 공약이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것이라는 증거와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박근혜후보는 실제 내용과 다르게 기초연금 공약을 국민에게 허위로 알리고 당선된 셈이 된다.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에 정부를 대표해 참여할 예정인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복지부장관은 지난 1월 20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애초 기초연금 공약이 ‘국민연금과의 연계’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께 현재(기초노령연금액)의 2배인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것과 달리 기초연금 대선공약의 진실이 처음부터 ‘국민연금과 연계한 차등지급’이었다는 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것이다.

박근혜후보 캠프에서 기초연금 공약을 만들었던 새누리당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술 더 떠 “공약집에 정확하게 (국민연금과 통합한다는) 문구가 나오고, 대통령이 후보 시절 TV토론을 할 때도 ‘통합해서 연계한다’고 밝혔다”고 재확인했다. 안부의장은 여러 다른 언론에서도 동일하게 말해 오고 있다. 이러한 증언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에게서도 나왔다. 그는 작년 9월 2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약 내용이 ‘무조건 모든 분들에게 20만원씩 드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라며 설명한 바 있다.

그렇다. 공약집에는 분명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운영'이라는 문구가 있다. 그런데 어디에도 차등지급이라는 말은 없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통합’이라는 단어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겠다는 의미이거나,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하나의 기관(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겠다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만약 국민들에게 민감한 ‘기초연금 금액의 차등화’가 ‘통합 운영’ 문구의 의미였다면 새누리당은 반드시 ‘차등지급’ 내용을 공약집에 명시하고 투표장에 나서는 국민에게 분명히 알려야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허위사실을 믿

고 투표장에 나설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이다.

<그림 1>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 내용

새누리의 약속	
■ 기초연금 도입	
-기본방향 : 현행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 함으로써, 사각지대나 재정 불안정성 없이 모든 세대가 행복한 연금제도로 개편	
-대상 및 내용 : 기초연금은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 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 지급	

3. 공약집 재정소요자료에서 ‘차등지급론’ 이 확인된다

기초연금 공약의 진실은 공약집 재정소요자료에서도 확인된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이를 행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마련해야할 재정규모는 얼마일까?

2014-17년 기간 최소 25.1조원이 필요하다(국민행복연금위원회 재정추계).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을 보면 총 공약소요재정 131.4조원 중 기초연금 공약 이행으로 책정된 금액은 14.7조원, 필요금액의 59%에 불과하다.

<표 1>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기초연금(안)별 소요재정

	2014~2017(계)	
	70%	100%
(1) 20만원 지급	42.9조원	60.3조원
(2) 인수위 안	40.5조원	44.3조원
(3) 균등 부분 반비례	36.1조원	48.3조원
(4) 100% 차등지급	38.5조원	
(5) 70% 차등지급	34.2조원	
(6) 최저생계비 150%	41.1조원	

- 출처: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회의자료
- ()는 불변가 기준.

<표 1>에서 보듯이,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4-17년 전체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할 때 필요한 돈이 총 60.3조원이다(공약집에는 2013년 법개정 즉시 지급한다고 했으나 행정 준비기간을 감안해 2014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또한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26일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 계획' 자료에 의하면, 같은 기간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유지할 때 드는 총 소요재정은 26.9조원이다. 따라서 박근혜후보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돈이 33.4조원이 된다. 이 중 중앙정부 몫이 약 75%이므로 박근혜 후보가 공약 이행을 위해 마련해야 할 재정은 25.1조원이다(장애인연금 2배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까지 감안해야 하며, 이 경우 최대 30조원에 이르나 이 자료에선 일단 25조원을 기준으로만 서술하겠음).

그런데 박근혜후보가 공약집에서 자신의 공약 이행을 위해 임기 중 필요한 재정 규모로 밝힌 금액은 131.4조원이다(올해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에서 135조원으로 조정). 기초연금 공약 이행을 위한 돈 25.1조원이 전체 필요재정 131.4조원에 온전히 포함되어 있을까? 아니다. <표 2>에서 보듯이, 박근혜후보가 공약집을 발표하고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약항목별 재정소요액을 보면 임기 중 기초연금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으로 14.7조원만 책정되어 있다. 최소 25.1조원이어야 할 필요재정이 14.7조원만 계산되어 있는 것(약 59%). 공약 이행에 10조원 이상 재정이 부족하다.

<표 2> 박근혜후보의 복지공약별 재정 소요액 (단위: 억원)

편안한 삶	
기초보장 사각지대 완화	23,205
맞춤형 빈곤정책 대상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46,410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18,200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28,420
실질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완화	8,000

신체장애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제공	468
신체장애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제공	632
기초연금의 도입	146,672
어르신 일자리 대폭 확대	11,339
소 계	283,346

- 출처: 박근혜후보, “대선공약 자료” (2012년 12월 11일)

이는 박근혜후보의 기초연금 공약이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공약의 실제 내용이 국민에게 알려진 것과 달리 59%만 이행할 계획이었다. 국민들은 모두 20만원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건만 정작 공약은 이와 달랐다.

정리하면, 보건복지부,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과 재정소요 자료 증거는 애초 기초연금 공약의 진실이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차등지급’임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허위 공약에 속은 것이다. 국민주권을 위임하는 대통령선거에서 말이다.

4. 박근혜후보도 ‘애초 차등지급’임을 알고 있었다!

박근혜후보는 기초연금 공약의 진실을 알고 있었을까? 캠프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차등지급’으로 설계했는데 후보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박근혜후보 역시 국민들처럼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선거운동에 나섰을까? 아니다. 박근혜후보 역시 자신의 기초연금 공약이 차등지급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대통령선거 3일전인 12월 16일에 열린 3차 TV 토론에서 박근혜후보는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을 약속하면서 “그것을(필자주: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체제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되면 비용도 줄일 수 있고”라고 설명한다. 일반 국민들에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문장이지만, 박후보는 ‘차등지급’ 내용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림 2> 박근혜 후보 기초노령연금 TV대선토론 장면



- 출처: 박근혜/문재인후보 대통령후보 대선토론 (2012. 12. 16)

심지어 박근혜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인 1월 28일 인수위 고용·복지 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기초연금 공약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거둬 설명했다.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적인 성격이 있지 않나. 기초연금 부분에다가, 그게 20만원이 안 되니까 20만원이 안 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워주는 방식”이라고, 즉 국민연금의 균등급여와 기초연금을 합해 20만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이야기다. 자신의 기초연금 공약이 시행되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받을 예정인 국민연금 금액과 연동해 기초연금을 차감 당하게 된다는 점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철학은 원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완전 연계”였다고 말한다. 오래전부터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연금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지급 방안에 대해 강한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언이다.

만약 진실이 이러하다면, 국가권력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의 꼴은 무엇이 되는가? 박근혜대통령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공약을 만든 안종범 부위원장도, 보건복지부장관도 모두 애초 공약이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이라고 말하고, 공약집 재정자료도 이를 확인해 주고 있으니 말이다.

<표 3> 정리: 기초연금 공약 진실과 선거 홍보

공약집 문구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운영 -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A값 10%(20만원) 지급
공약집 재정자료	2014-2017년 완전 기초연금 지급 시 필요재정의 59%만 책정
증언	- 박근혜 당선자: 국민연금 균등급여에서 20만원 안되는 부문만큼 기초연금을 채워준다 - 황우여 대표: “공약 내용이 ‘무조건 모든 분들에게 20만원씩 드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 안종범 부위원장: “공약집에 정확하게 (국민연금과 통합한다는) 문구가 나오고, 대통령이 후보 시절 TV토론을 할 때도 ‘통합해서 연계한다’고 밝혔다” -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애초 기초연금 공약이 ‘국민연금과의 연계’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홍보 현수막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원”

5. 대통령은 답하라! 기초연금 공약의 진실은 무엇인가?

정부와 새누리당은 가능한 조속히 기초연금방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 국민들은 반드시 알아야 내용이 있다. 애초 기초연금 공약의 진실은 무엇인가?

이 진실 논란을 매듭지을 당사자는 박근혜대통령이다.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신뢰와 원칙’을 중시한다 하지 않았는가! 기초연금 공약의 진실은 무엇인가? 국민들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투표를 했다. 애초 공약의 진실이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이었나?

II. 불편한 진실 Two: 기초연금액, 8년후면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줄어든다!

1.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안은 국민연금 불신 부추겨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장 뜨거운 쟁점은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이나 아니면 국민연금과 별도로 동일액 20만원을 지급하느냐에 쏠려 있다. 시민단체들은 여러 차례 국민연금 불신을 가중시키는 차등연계방안을 비판해 왔다. 기초연금은 애초 국민들에게 말한 대로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현행 기초노령 연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 노인층의 생활을 보장하는 취지도 지니지만 동시에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급여율이 60%에서 40%로 급격히 삭감된 것을 보전하는 의미도 지닌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급여율이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 것과 연동해 기초노령연금 급여율도 5%에서 시작해 2028년에 10%에 도달하도록 기초노령연금법이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 별도로 운영되어야 한다.

물론 보편주의 기초연금이 정부안보다 재정이 더 소요된다. 부자 노인에게도 동일하게 기초연금을 제공하고 그만큼 혹은 그 이상을 세금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게 복지와 재정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만약 정부안처럼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감할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구축되기 어렵다. 지금도 국민연금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후 국민연금 개혁 과제가 결코 만만치 않은 현실에서 국민연금 연계방안은 적합한 선택지가 아니다.

2. 기초연금 설계도의 중대한 변화: 소득 연동 → 물가 연동

정부안에는 지금까지 논란의 중심이었던 국민연금 연계와 별개로 중대한 설계도 변화가 담겨 있다. 바로 기초연금액의 물가연동 조항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국민연금 가입자 직전 3년 평균소득(A값)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초노령 연금액을 명시하고(제5조), 부칙에서 이 연금액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A값의

10%로 인상한다고 명하고 있다. 즉, 기초노령연금액이 가입자 평균소득의 증가와 연동해 늘어나는 구조이다.

이에 반해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현행과 달리 사실상 물가와 연동해 움직이도록 설계도가 근본적으로 수정되었다. 정부안처럼 물가와 연동해 기초연금액이 정해지면 해가 갈수록 현행 소득연동 방식보다 금액이 적어지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지난해 9월 정부가 기초연금 입법예고안으로 내놓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카드가 등장하리라 예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현행 소득연동 원리가 물가 연동으로 바뀌는 내용이 입법예고안에 전격 담긴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를 비롯해 야당 국회의원들까지 물가연동 방식의 문제를 지적했고, 정부는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문구를 수정해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정부 최종안의 내용은 꼼수를 동원해 사실상 물가연동 방식을 고수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정부안은 기초연금액을 시행할 때만 당시 A값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인 20만원으로 정하고(부칙 6조), 이후 물가와 연동한 후(5조), 5년 주기로 물가, A값, 노인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한다(8조). 애초 입법예고안에서는 물가와 연동하는 것이었으나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5년 주기 조정을 추가하였다. 하지만 3가지 요인을 고려해 조정하더라도 다시 5년간 물가와 연동되는 것이기에 물가연동방안에 가깝다. 기초연금이 매년 물가와 연동되어 왔기에 5년째 해라고 갑자기 크게 오르거나 내리기는 힘들 것이다. 결국 매년 물가만큼 오르다 5년마다 미세 조정을 거쳐 다시 물가가 반영되는 ‘사실상’ 물가연동 방식이다.¹⁾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제8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 수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1) 정부는 물가연동 방식을 비판한 필자 칼럼에 대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안이 사실상 물가방식임을 인정한다. 정부는 5년 주기 조정을 말하면서도, “기초연금법 정부안에서는 기초연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률로 인상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기초연금액도 물가만큼 인상이 되어야 국민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무연금자와 형평을 기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 ‘기초연금안에 숨겨진 독약’ 칼럼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함”. 2014. 2. 18)

통상 물가상승률은 가입자 소득증가율의 절반에 그친다. <표 4>의 국민연금연구원의 장기 재정추계 수치를 보면, 미래 2050년까지 물가인상률은 평균 2.5%로 소득증가율 5.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표 5>에서 보듯이 기획재정부가 구성한 장기재정전망협의회 역시 물가상승분을 넘는 실질임금상승률을 2~3%대로 설정하고 있다.

<표 4> 미래 국민연금 A값 증가율과 물가상승률

	2020	2030	2040	2050	평균증가율
국민연금 A값증가율	7.0	5.7	4.2	4.0	5.2
물가상승률	3.4	2.5	2.0	2.0	2.5

- 출처: 최동익 의원 보도자료 “20년후 반값되는 기초연금” (2013. 10. 7)

<표 5> 장기 실질임금상승률 전망

	2001~2010	2011~2020	2021~2030	2031~2040	2041~2050	2051~2060
실질임금상승률	3.1	3.2	3.2	2.4	2.1	2.0

- 출처: 장기재정전망협의회 자료 (2차 국민연금재정추계 자료에서 재인용).

보건복지부는 최근 3년간(2009년-2011년) 실적치를 근거로 물가상승률이 A값 상승률을 상회하였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위 기간은 경제 위기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로 이것을 근거로 물가상승률이 소득증가율보다 높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편향적이다.

<표 6> 2009-2011년 물가상승률과 A값 상승률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물가상승률	2.8%	2.9%	4.0%
A값상승률	2.3%	1.8%	3.7%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안에 숨겨진 독약” 칼럼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함”(2013. 2. 18).

2. 물가연동되면 8년 후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모두 감액 당해

정부의 '사실상' 물가연동 기초연금에는 심각한 두 가지 독약이 숨겨 있다. 하나는 노인복지에 대한 국회 입법권이 훼손되고 있다. 노인복지의 핵심인 기초연금 액이 행정부 시행령 사안으로 전락해 버린다.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기초연금액을 정하겠다는 이야기이다. 또 하나는 기초연금이 향후 8년부터는 현행 기초노령 연금액보다 오히려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노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만약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이 물가만큼만 오른다면 장차 노인들은 현행 방식에 비해 얼마나 손해일까?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는 2028년까지 급여율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과 연동해 10%까지 오르도록 명시되어 있다. 미래 물가인상률은 소득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면 물가연동 급여율은 올해 가입자 평균소득의 10%로 시작하지만 10년 후인 2024년에는 7%로 줄어들고 22년 후인 2036년에는 5%로 반토막나 버린다(2061년에는 급여율이 3%로 낮아짐).

나아가 현행법 취지대로 국회가 올해 '단계적으로' 급여율 인상방안을 정했다고 치자.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은 5% 급여율에서 꾸준히 오르는 반면 물가연동 기초연금은 10%에서 계속 하향해 2022년에 서로 교차하게 된다. 금액으로 보면, 2022년에 물가연동 기초연금액은 27만원으로 현행 단계별 인상 기초연금액 28만원보다 작아진다. 즉 앞으로 8년 후부터는 기초연금을 받는 모든 노인들이 현행 제도보다 덜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복지는 비록 속도는 더디어도 조금씩 확대되는 역사를 밟아왔다. 무상급식을 전환점으로 복지국가 꿈도 꾸게 되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 분야에서 그 물길을 거꾸로 가려 한다. 처음에는 기초연금이 오르지만 결국은 지금보다 작은 기초연금으로 귀결시키는 '기초연금 개악'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표 7> 기초연금 미래 비교: 물가연동과 소득연동 방식(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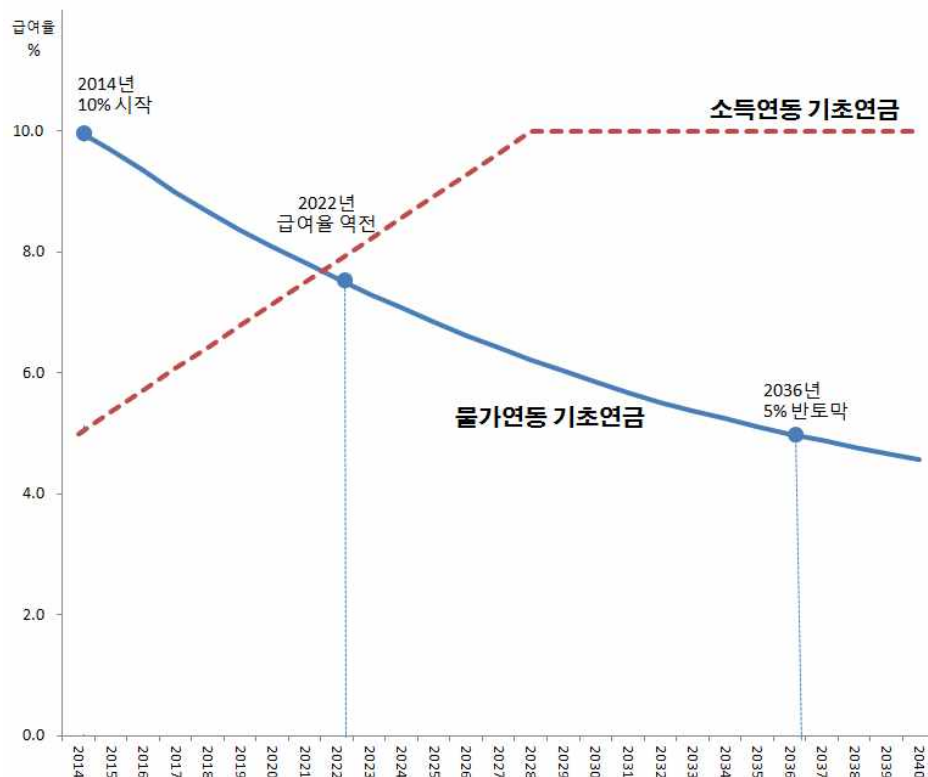
	가입자 평균소득(A값)	A값 증가율	물가	물가연동 기초연금*		소득연동 기초연금**		평가
				기초연금액	급여율	기초연금액	급여율	
2014	2,104,415		2.6	210442	10.0	105221	5.0	현행보다 2배
2015	2,237,152	6.3	3.1	216966	9.7	119847	5.4	
2020	3,180,513	7.0	3.4	257189	8.1	227180	7.1	
2022	3,617,477	6.6	3.1	273648	7.6	284230	7.9	현행보다 낮아짐
2028	5,189,775	5.9	2.6	322960	6.2	518978	10.0	현행제도 10% 도달
2036	7,752,005	4.5	2.1	387770	5.0	775201	10.0	급여율 반토막
2040	9,179,466	4.2	2.0	420147	4.6	917947	10.0	
2050	13,729,580	4.0	2.0	512156	3.7	1372958	10.0	
2060	20,279,377	4.0	2.0	624316	3.1	2027938	10.0	
2061	21,100,430	4.0	2.0	636802	3.0	2110043	10.0	급여율 3% 전락

*물가연동 기초연금 : 정부안을 완전 물가연동으로 가정.

**소득연동 기초연금 : 현행 기초노령연금 급여율을 5%에서 매년 0.36%씩 인상해 2028년 10% 도달 가정.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국회(최동익 의원실) 제출 자료를 재가공.

<그림 3> 기초연금 미래 비교: 물가연동과 소득연동 방식



3. 향후 국민연금 가입자 중 20만원 수령자 아무도 없다!

정부안에 따를 경우,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금액 수치도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심지어 2028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 중 기초연금을 20만원(현재가치)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수 있다.

<표 8>에서 보듯이, 정부는 2028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국민연금 법정급여율 40% 체제 완성 시점), 가입기간이 15년까지는 20만원을 받고, 이후 매년 6700원씩 감액해 30년 이상 가입자부터 10만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한다.

<표 8> 정부 설명: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기초연금액 (단위: 만원)

가입기간	① 현재세대 노인 (‘14.7월 수급자)	② 미래세대 노인 (‘28년 이후 소득대체율 40%)
10년	20	20
11년	20	20
12년	19	20
13년	18	20
14년	17	20
15년	16	20
16년	15	19
17년	14	19
18년	12	18
19년	11	17
20년	10	17
⋮	⋮	⋮
30년	10	10

출처: 보건복지부, “2014년 7월, 상위 30%를 제외한 65세 이상 거의 대부분 노인에게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2014. 9. 25).

하지만 이러한 설명에는 오류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수치가 유효하려면, 기준연금액이 물가가 아니라 A값과 연동해 동일하게 움직여야만 한다. 정부는 가입기간별 기초연금 계산에는 기준연금액과 A급여가 모두 A값과 연동하는 것으로 가정했으나, 실제 정부 입법안에서 기준연금이 사실상 물가연동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애초 정부가 설명한 2028년 가입자의 기초연금액 수치는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그래서 정부 입법안 마련과정에서 물가 연동 방식이 줄속적으로 갑

자기 삽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된다). 다소 복잡하지만 그 내역을 살펴보자.

정부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연금액에서 조정금액을 뺀 후, 다시 부가연금액을 더하는 구조이다. 이 때 기준연금액은 처음에는 A값 10%, 즉 20만원으로 시작하지만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조정금액은 국민연금에 있는 소득재분배 급여액(A급여)에 조정계수 2/3을 곱한 금액이다. 이 때 최대금액은 기준연금액(20만원)이고 최소금액은 부가연금액(10만원)으로 설정된다. 제6조가 두 요소가 어떠한 최종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넘을 수 없도록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그림 4> 정부의 기초연금액 산정도식

기초연금액	=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 <tr> <td style="padding: 5px;">기준연금액</td> </tr> <tr> <td style="padding: 5px;">20만원으로 시작 이후 사실상 물가연동 복지부장관 고시</td> </tr> </table>	기준연금액	20만원으로 시작 이후 사실상 물가연동 복지부장관 고시	-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 <tr> <td style="padding: 5px;">조정금액</td> </tr> <tr> <td style="padding: 5px;">(A급여 × 2/3)</td> </tr> </table>	조정금액	(A급여 × 2/3)	+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 <tr> <td style="padding: 5px;">부가연금액</td> </tr> <tr> <td style="padding: 5px;">기준연금액의 1/2</td> </tr> </table>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2
기준연금액												
20만원으로 시작 이후 사실상 물가연동 복지부장관 고시												
조정금액												
(A급여 × 2/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2												

제6조(기초연금액의 한도)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예를 들어 가입자 김씨의 A급여가 30만원이라면 2/3을 곱해 조정금액은 20만원이 된다. 부가연금액은 10만원이므로, 최종적으로 김씨의 기초연금액은 10만원이 된다(기준연금액 20만원 - 조정금액 20만원 + 부가연금액 10만원).²⁾

정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2028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15년 가입까지는 현재가치 금액으로 20만원을 받는다고 홍보한다. 이 설명이 유효하려면 기준연금액과 A값

2) A값과 A급여는 다른 개념이다. A값은 가입자 평균소득 금액이고, A급여는 연금액 중 균등배분액을 가리키며 그 금액은 개인별로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안의 기초연금액 계산을 보면, 조정금액은 가입자마다 계산되는 A급여에 조정계수 2/3을 곱해 도출된다. 이 때 조정계수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할인율의 의미를 가지며 가입자별로 조정금액을 다르게 만드는 변수는 A급여와 가입기간이다. 2028년 연금체제에서 A급여는 20년 가입자의 경우 급여율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개인별 A급여가 가입기간에 비례해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10년이면 A급여는 A값의 5%, 가입기간이 20년이면 A급여는 A값의 10%, 가입기간이 30년이면 A급여는 A값의 15%가 된다.

여 동일하게 움직여야 한다. 향후 가입자 평균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A급여 상승하고 이에 따라 기준연금액도 동일하게 올라야 정부안의 수치가 도출된다.

그런데 정부안에서 기준연금액은 사실상 물가와 연동하고 개인별 A급여는 가입자 평균소득(A값)에 따라 정해진다. 기준연금액에 비해 A급여가 갈수록 커지니 시간이 흐를수록 기준연금액에 비해 조정금액이 빠르게 커진다. 그 결과 2028년 연금체제에서 1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모두 조정금액이 10만원을 넘게 된다. 즉 기준연금 20만원에서 조정금액을 뺀 금액이 10만원에 이르지 못하니, 여기에 부가연금 10만원을 더해도 모두 20만원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즉 국민연금 수급권을 지닌 10년 이상 가입자 중에서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된다.

정부가 10~15년 가입자는 20만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준연금액이 A값과 완전 연동하지 않는 한 이러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는다. <표 9>의 필자의 분석에서 보듯이, 만약 기초연금이 물가와 완전 연동한다고 가정할 경우, 10년 가입자는 19만원, 11년 가입자는 18만원으로 줄어들어 19년 이상 가입자부터는 모두 10만원만 받게 된다.

이러한 추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해진다. <표 10>에서 보듯이, 기준연금액과 A급여 격차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준연금액이 A값이 5%로 반토막나는 2036년 경우, 10년 가입자가 받는 기초연금액은 현재가치로 17만원으로 낮아지고 15년 이상 가입자는 모두 10만원만 받게 된다.

<표 9> 완전 물가연동 방식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A급여와 기초연금액 비교(2028년 미래 가입자)

가입기간	기준연금 (물가연동)	A급여		기초연금	
		정부가정	실제	정부설명	실제
10년	20	10	16	20	19
11년	20	11	18	20	18
12년	20	12	19	20	17
13년	20	13	21	20	16
14년	20	14	22	20	15
15년	20	15	24	20	14
16년	20	16	26	19	13

17년	20	17	27	19	12
18년	20	18	29	18	11
19년	20	19	30	17	10
20년	20	20	32	17	10
21년	20	21	34	16	10
22년	20	22	35	15	10
23년	20	23	37	15	10
24년	20	24	38	14	10
25년	20	25	40	13	10
26년	20	26	42	13	10
27년	20	27	43	12	10
28년	20	28	45	11	10
29년	20	29	46	11	10
30년	20	30	48	10	10

기준연금: 2014년 20만원 시작으로 물가연동 인상

A급여: 2028년 가입자평균소득 인상 반영 (20년 가입 시 2028년 현재가치로 물가연동의 1.6배인 32만원)

<표 10> 완전 물가연동 방식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기초연금액 비교

가입기간	기준연금 (물가연동)	2014년 수급	2028년 가입	
			정부설명	실제 (2036년 가입)
10년	20	20	20	19 (17)
11년	20	20	20	18 (15)
12년	20	19	20	17 (14)
13년	20	18	20	16 (13)
14년	20	17	20	15 (11)
15년	20	16	20	14 (10)
16년	20	15	19	13 (10)
17년	20	14	19	12 (10)
18년	20	12	18	11 (10)
19년	20	11	17	10 (10)
20년	20	10	17	10 (10)
21년	20	10	16	10 (10)
22년	20	10	15	10 (10)
23년	20	10	15	10 (10)
24년	20	10	14	10 (10)
25년	20	10	13	10 (10)
26년	20	10	13	10 (10)
27년	20	10	12	10 (10)
28년	20	10	11	10 (10)
29년	20	10	11	10 (10)
30년	20	10	10	10 (10)

기준연금: 2014년 20만원 시작으로 물가연동 인상

A급여: 2028년 가입자평균소득 인상 반영 (20년 가입 시 2028년 현재가치로 물가연동의 1.6배인 32만원,
2036년 물가연동의 2배인 40만원)

Ⅲ. 보편주의 기초연금 재정: 사회적 합의만 이루어지면 조달 가능하다!

정부는 보편주의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우리사회가 재정적으로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예단한다. 물론 작은 부담이 아니다. 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는 게 시대적 흐름이라면 이에 따른 연금복지 지출과 재정 마련도 감당해야할 시대적 과제이다. 정부는 재정 수입에선 현재의 국민부담률이 그대로 유지하고 지출만 늘어나는 것을 강조해 미래 재정불안을 강조한다. 이는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못한 접근이다. 공정하게 재정 전망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들이 전향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모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건만, 지금까지 정부가 취해 온 미래 연금재정 관련 설명은 이와는 거꾸로 가고 있다.

1. 기초연금 세금 부담이 1인당 28만원이라고?

우선, 정부가 국민의 세금 부담을 지나치게 포장한다. <표 11>처럼, 정부 기초연금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2015년에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1인당 연 2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만약 시민사회 방안대로,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20만원을 지급하려면 내년에 부담액은 41만원으로 늘어난다며 사실상 '협박'한다. 이러한 정부 자료는 대다수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기도 했다.

<표 11> 기초연금 도입안에 따른 조세부담액(경상가 기준)

구분	대안별	2015년	2040년	2060년
국민1인당 조세 부담액	정부안	20만원	195만원	519만원
	70% 20만원 지급	21만원	219만원	600만원
	100% 20만원 지급	30만원	316만원	881만원
생산가능인구 1인당 조세부담액	정부안	28만원	346만원	1,043만원
	70% 20만원 지급	29만원	387만원	1,206만원
	100% 20만원 지급	41만원	559만원	1,772만원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해명자료: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정부안이 현 세대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면서 우리 자녀세대의 부담은 줄이는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2014. 1. 21)

이는 문형표장관이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바로 알리기' 활동에 본격나선 시점에 나온 수치들인데, 사실상 '반칙'을 쓰고 있다. 2015년 정부안대로 가면 연 10조 원, 보편주의 방식으로 가면 연 15조원이 든다. 당연히 재정이 늘어야 한다. 그런데 필요재정을 인구 대비 1/n로 나누어 국민에게 설명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어느 나라에서 세금을 1/n으로 거두는가? 이는 매번 예산안 제출할 때 정부와 보수 언론들이 쓰는 국민 협박 방식이다. 작년 가을 2014년 예산안이 발표되었을 때 "내년 1인당 세 부담 550만원, 올해보다 10만원 늘어"와 같은 기사들이 대표적이다. 간접세로 해도 더 많이 소비하는 상위계층들이 더 많이 낸다. 시민사회는 당연히 직접세 인상을 통해 조달하자 제안한다. 진정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알리려면, 현행 세제구조에 토대를 두고, 연간 10조원의 기초연금 재정이 계층별로 어떻게 귀결되는 지를 말해야 한다.

<표 12> 정부 기초연금안 소요재정 (단위: 조원)

		2014년 상반기 (기초노령연금)	2014년 하반기 (기초연금)	2015년	2016년	2017년
재정 소요	총액	2.2	4.8	10.3	10.9	11.4
	국비	1.6	3.6	7.7	8.1	8.5
	지방비	0.6	1.2	2.6	2.8	2.9

출처: 보건복지부, “2014년 7월, 상위 30%를 제외한 65세 이상 거의 대부분 노인에게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2014. 9. 25).

2, 미래 기초연금 재정부담 규모: GDP 대비로 검토해야

기초연금은 박근혜정부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에게 ‘알린대로’ 보편주의 기초연금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미래 재정 부담 걱정을 하지만, 이미 재작년 대선에서 보편주의 기초연금을 정치적으로 재가 받지 않았는가? <표 13>을 보면, 2040년 기초연금 재정소요액은 GDP 3.1%. 국민연금 지출을 합쳐도 연금지출도 총 7.2% 수준이다.

<표 13> 기초연금 방안별 장기 재정 전망 (단위: GDP %)

	2020		2040		2060	
	70%	100%	70%	100%	70%	100%
(1) 20만원 지급	0.9 (2.5)	1.2 (2.8)	2.1 (6.2)	3.1 (7.2)	2.8 (9.7)	4.0 (10.9)
(2) 인수위 안	0.8 (2.4)	0.9 (2.5)	2.0 (6.1)	2.2 (6.3)	2.5 (9.4)	2.8 (9.7)
(4) 100% 차등지급	0.8 (2.4)		1.9 (6.0)		2.5 (9.4)	
(5) 70% 차등지급	0.7 (2.3)		1.7 (5.8)		2.2 (9.1)	

출처: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기초연금(안)별 소요재정” (2013. 6). * ()는 국민연금 + 기초연금

이는 2010년 기준 OECD 평균 연금지출 9.3%, EU 27개 국가 평균 10.8%에도 미치지 못한 규모이다. 물론 지금의 세입 규모에선 부담이 되는 지출이지만, 이후 세입을 다른 나라만큼 확대해 나간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미래 연금지출 절대 규모를 두고 미리 조달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빈약한 세입구조를 감안하면, 보편주의 기초연금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상위계층에게 세금 책임을 요청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강한 복지, 강한 재정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표 14> 주요국가 연금지출 전망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OECD	9.3	9.8	10.6	11.2	11.7	-
EU27	10.8	22.2	22.9	12.6	13.1	13.2

출처: OECD, Pension Outlook 2012.

3. 이제 세입확충 논의를 벌이자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민부담률이 낮다. 2010년 기준 한국 국민부담률이 GDP 25.1%로 OECD 평균 33.8%에 비해 무려 8.7% 포인트 작다. 2013년 GDP 예상액 1330조원을 적용하면 무려 약 116조원이 부족분인데, 이는 2013년 중앙정부 복지지출 100조원보다 더 많은 돈이다. 그만큼 국가재정 규모가 작고,

복지지출에 투입할 재정 여력도 부족하다.

<표 15> 세목별 세입 비교(단위: GDP %, 2010년)

	소득세	법인세	자산세	소비세	기타	사회보장기여금				국민 부담률
						고용주	피고용자	기타*	계	
OECD(a)	8.4	2.9	1.8	11.0	0.5	5.3	3.2	0.6	9.1	33.8
한국(b)	3.6	3.5	2.9	8.5	0.8	2.5	2.4	0.8	5.7	25.1
차이(a-b)	-4.8	0.6	1.1	-2.5	-0.3	-2.8	-0.8	0.2	3.4	8.7

- 출처: OECD(2012), Revenue Statistics 1965-2011. 기타*에는 자연자, 국가 몫 등이 포함.

<표 15>에서 확인되듯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세목은 소득세와 기업의 사회보장기여금이다. 소득세에서 GDP 4.8%, 기업의 사회보장기여금에서 2.8% 작다. 우리나라 국민들과 기업들이 OECD 평균만큼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낸다면, 2013년에 GDP 7.6%, 무려 100조원의 복지재정이 확보될 수 있다!

이러한 조세 실태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우선 국민 모두가 소득세를 적게 내고 있다. 소득세가 가파른 누진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상위계층일수록 세금을 훨씬 덜 내고 있다. 이에 소득세를 강화해 국민들이 자신의 소득별로 누진적 세금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소득세 부족분 GDP 4.8%는 2013년 기준 64조원으로 현재 국민들이 내고 있는 소득세(51조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또한 기업의 세금 책임이 가볍다. 기업은 법인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낸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세율과 세입에서 외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기업 몫 사회보장기여금이 매우 작다³⁾.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기업 사회보장기여금 부족분이 GDP 2.8%로 2013년 기준 37조원에 이른다. 현재 기업들은 지금 내고 있는 법인세 수입(48조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사회보장기여금을 덜 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조세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시급한 과제는 일반 국민들이 소득에 따라 누진적으로 소득세를 더 내야하고, 기업들이 사회보장기여금을 지금보다 2

3) 법정 법인세율은 외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전체 국민소득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몫, 대대적인 세금감면 특혜 등을 감안하면 삼성전자 등 핵심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낮은 수준이다.

배 이상 책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금융관련세 등 직접세를 직접 강화하는 방안도 있고, 이러한 세목에 복지목적세를 부과하는 사회복지세도 입도 가능하다. 어떻게 세입을 확충할 것인지 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토론문

김경자 / 민주노총 부위원장

1. 불신의 연금정치 : 정치 불신 + 제도 불신 = 안녕하지 못한 노후

1) 2007년 일방적 연금개악 : 여·야합의 그러나 사회적 합의는 실패.

-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2006)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 진행키로 했으나 일방적 추진 → 시민사회단체 탈퇴.
- ‘기금고갈론’에 입각해 급격한 연금 급여 삭감 : 소득대체율 60% → 2008년 50%(10%p 삭감) → 2028년까지 40%로 인하(매년 0.5%씩 삭감)
 - 실질가입기간을 고려하면, 2060년이 돼도 21.5% 수준에 불과 : 2007년 쟁점이 사각지대 에 따른 ‘무연금’ 문제였다면, 이제는 ‘저연금’ 문제도 심각해진 상황.
 - 공적연금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급여의 적절성’의 위기 → 노후의 위기.

2) 여야합의 이후. 낮아지는 국민연금,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인상은 감감무소식.

- 2007년 여·야 합의에 근거한다면, 국민연금이 낮아지는 만큼 기초노령연금도 매년 0.25%씩 인상해 2028년 10%가 되어야 했음(최소).
- 2011년 2월에서야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됐지만, 5회의 전체회의와 2회의 여·야·정 협의체만 진행된 채 아무런 성과 없이 활동 종료.

3) 2012년 대선공약으로 어르신들 다시 우롱하기

- 박근혜 대통령,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2배 인상’ 공약. 그러나 당선되자마자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일수록 덜 주는 기초연금방안 제시(오히려 저임금·저소득계층 차별) →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자,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구성해 사회적 논의 진행하겠다고 함. → 기초연금 후퇴를 위한 명분삼기 → 가입자단체 탈퇴.

4)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차별하는 짝퉁 기초연금 발의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빛내서 노인들에게 20만원 주는 게 새 정치냐” →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말? 벌써 국민과의 약속은 잊혀진지 오래.
- “기초연금 시간 끌기?” 반성도 모자라, 오히려 국민을 협박하는 새누리당.
 - 정치에 대한 불신 부추기고, 연금제도에 대한 불만 높이고 있음
 - :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및 반납, 추납 신청 급락은 이러한 불신의 작은 신호일 뿐 (2013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신규가입 역시 전년도에 비해 절반 이하로 급감 : 106,697명 → 48,574명)

2. 정부 주장 비판 : 왜 국민연금 연계에 집착하는가.

- 국민연금 연계가 원칙?

<표 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연계 시도

시기	내 용
2004년	○ 3월 한나라당 연금 TF 구성(윤건영, 김용하, 안종범 등 주요멤버로 참여) ○ 10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주장 ○ 12월 국민연금법 개정안 제출(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120명) - 핵심은 국민연금은 완전소득비례(소득대체율 20%) + 기초연금(20%) : TF의 결과물 ※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시기
2006년	○ 5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연금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시기)
2007년	○ 당시 한나라당의 2004년 입장은 2007년 국민연금 개악 당시에도 동일하게 주장됨. - 당시 여·야간 다양한 대안 가운데 A값 비중 축소도 거론된 바 있었음.
2008년	○ 이명박 정부 당시 : 국민연금을 소득비례로 하고 기초연금과 통합하는 방안 공약화. - 실제 현실화되지 않았으며,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검토(공공부조화).
2012년	○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연금체계를 형성하고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비례연금으로 구조화하여 운영”하겠다고 함(대선 정책 공약집) ○ 대선토론 과정에서도 “국민연금 A값이 기초연금”이라고 언급.

2013년	○ 인수위 시기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덜 주는 방안 → 대상은 전체에서 70%로 축소되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덜 주는 방안으로 변경.
-------	--

- 2007년 여·야 합의문 5항 “공적연금제도의 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기초노령 연금의 병급 조정 규정을 삭제한다”고 명시. 이는 어느 한 연금을 더 준다고, 다른 연금을 삭감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최소 50% 명목 소득대체율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

-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A값의 ‘재분배 기능 중복’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정부와 새누리당은 마치 국민연금 가입자가 특혜라도 받는 것처럼 ‘국민연금 가입자 혜택’ 운운하며 형평성 주장.

→ 그러나 국민연금 급여가 대폭 삭감된 현실을 고려하면 의미 없는 주장이며, 오히려 정부안과 같은 방식은 또 다른 형평성 문제만 야기(예 : 고소득 단기가입자와 저소득 장기가입자 간 소득역진문제 등).

1) 국민연금 A값 연동 → 물가 연동으로 변경 : 꿈수정치의 극치.

- 정부는 기초연금 20만원 수급자와 국민연금 30만원 수급자의 연금액 추이를 볼 때, A값 상승률을 적용할 경우 2027년부터는 기초연금이 46.2만원, 국민 연금은 44.8만원으로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해 현행 A값 인상률 보다 더 낮은 물가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를 차별하는 방안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보다 보험료 납부 없이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연금액이 더 많아지는 비합리적인 경우가 발생’하니 물가인상률과 연동해 더 낮춰야 한다?

→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연계 없이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국민연금 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기초연금 급여액을 대폭 줄여가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개악.

2) 후세대 부담? 사회적 부담!

- 이미 여러 차례 GDP대비 지출규모를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해

야하고, 또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 후세대 부담론은 유치한 세대갈등 유발 주장

- 어차피 노인인구 비중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음. 다만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 지금처럼 개인이나 가족에게 전가하거나, 시장에서 민간보험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력에 의존하면서 노후빈곤과 노후소득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자는 것인지?

→ 노후에 대한 사회적 부담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3. 마치며

- 현재 국회에서 어떤 기초연금을 통과시키느냐에 따라, 수백만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소득과 생활이 달라질 수 있음. 제대로 된 기초연금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
-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와 미래세대 차별하는 방안. 공약은커녕 법 부칙보다 후퇴한 방안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임.
- 정치적 공방을 핑계로 한 방치 또한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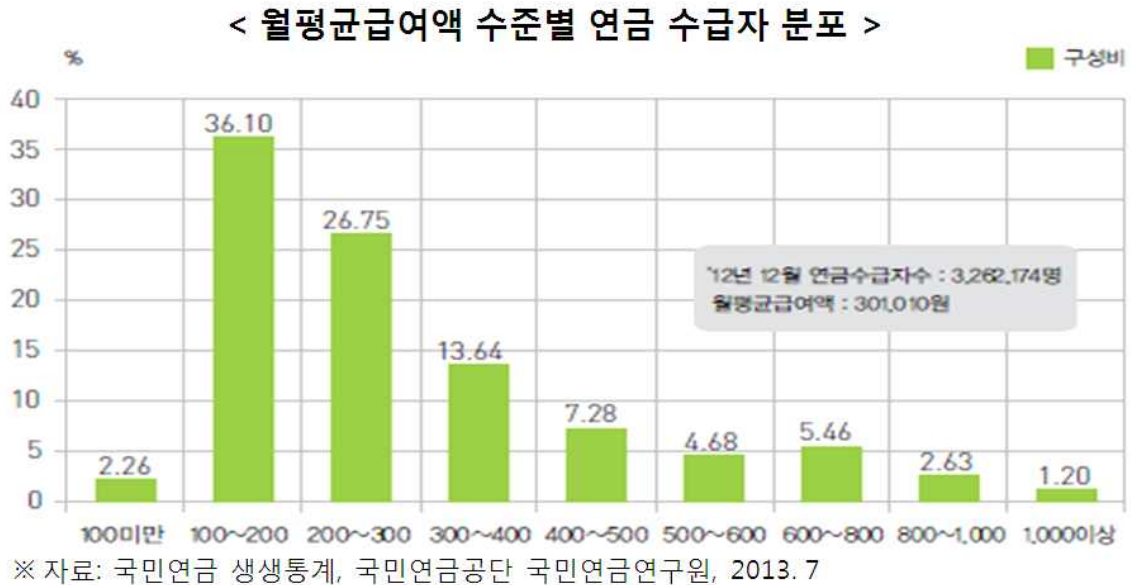
국민연금에 연계한 기초연금법안, 국민들은 분노한다.

김남희 /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변호사

1. 국민연금 얼마나 받고 있는지, 대통령과 장관님은 아시나요?

지난 3월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문형표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법안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기초연금에서 큰 혜택을 보시니까 그것을 조금 줄여서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였다는 발언을 했다. 또한 “88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 지금 연금 받고 계시는데 그 연금은 보험료 2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보험료 3%부터 내신 겁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것 자체로 엄청난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라는 발언도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과 문형표 장관의 거듭된 주장은 바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기초연금은 좀 깎아서 지급해도 된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엄청난 혜택이 뭔지 한번 살펴보자.



2012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약 30만원이다. 게다가 68%이상이 3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연 30만원의 연금이 엄청난 혜택인가? 아니 월 30만원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가? 국민연금 초기가입자들의 보험료율이 낮았던 것은 너무 뒤늦은 공적연금의 도입 때문에 불안한 노후를 맞이하는 산업화 초기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아니었던가? 게다가 그 예우조차 이렇게 초라한 수준인데 (100만원 이상 수령하는 사람의 비율이 1.2%에 불과할 정도로) 과연 이 정도 수준의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수령액 삭감의 근거가 될 수 있나? 박근혜 대통령과 문형표 장관의 잘못된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발언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연금제도가 안정되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14년 18.6%에서 2030년에 겨우 23.2%까지 올라서 정점을 찍었다가, 다시 하락하게 된다는 추계도 있다. 이 추계에 따르면 세월이 흘러도 국민연금의 수준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 보장수준을 늘려도 모자를 판에 이런 초라한 연금을 이유로 기초연금마저 삭감한다니 황당한 발상이다.

2. 기초연금 깎아서 지급하면 그 부담은 누가 지나요?

또한 보건복지부가 거듭 말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기초연금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을 적게 지급한다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과연 줄어들까?

우선 공적연금의 보장수준이 낮아져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게 되면, 그 노인은 그냥 굶어죽거나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하나? 결국 그 노인의 생계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것은 주로 자녀이며(필자도 그 당사자이다), 때로는 사회나 시설이 될 수도 있다. 결국 그 부담도 미래세대에 돌아간다. 노후빈곤의 책임을 가족이 부담하는 것이 옳은가 사회가 부담하는 것이 옳은가? 지금도 노후빈곤 문제를 빈곤의 가족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결국 빈곤의 대물림과 가족해체까지 이르는 것이 현실이고, 부모의 노후가 부담이 되는 자녀들은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여 저출산고령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계속되지 않으려면 공적연금은 더욱 발전하고 확대되어야 한다.

3. 미래세대가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짓말까지...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에 대한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이후에는 기초연금 도입 시 기초노령연금을 유지할 때보다 재정소요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검토보고서 35면). 이는 바로 국가가 노후를 위해 책임을 덜 지겠다는 말이다. 그럴 경우 미래세대는 당연히 보장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한데다 물가변동에 좌우되는 정부안에 따르면, 미래세대의 기초연금 수령액은 현재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훨씬 떨어지게 되는데도, 정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액을 합한 총 공적연금액은 증가하기 때문에 미래세대가 불리하지 않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검토보고서 제41면 참조).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2028년까지 A값의 10%가 보장되었던 미래세대의 권리를 박탈하고 현격히 축소하면서 하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공적 연금이 축소되면 결국 노후가 불안한 미래세대들은 개인연금이라도 궁여지

책으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수익률도 형편없이 낮으며 현재 10년 유지율은 20%에 불과하며 빈약한 공적연금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공적연금이 바로 서지 않으면 미래는 불안하고 청년들은 계속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는 3포 현상이 지속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최근 정부의 잘못된 기초연금안에 분노한 청년단체들이 모여 ‘기초연금보장연석회의’를 꾸리고 기자회견, 1인시위, 대학간담회 등 활동을 하고 있다. 더 이상 정부는 미래세대 걱정하는 척 하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불안으로 몰아넣지 말고, 청년들의 진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초연금의 불편한 진실 토론문

김연명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오건호박사의 발제문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온 기초연금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연금제도의 존재 의미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자세히 분석해 주고 있음. 특히 기초연금의 물가연동과 소득(A값)연동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상세히 분석한 부분은 정부안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있음. 오건호박사의 대부분의 분석과 논조에 대해 동의하며 공적연금에서 세대간 부담의 공평성 문제를 더 강조하여 논의해 보기로 함.
- 박근혜정부가 내 놓은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안이 논리적인 문제와 비난에 부딪히자 정부가 마지막으로 내세우는 논리가 기초연금을 후하게 주면 미래세대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일종의 협박임. 즉 기초연금을 많이 주면 그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후세대의 부담을 생각해 기초연금을 적당한 수준에서(!) 깎아야 한다는 논리임. 그럴듯해 보이는 이 주장은 너무나 많은 허점을 갖고 있음.
- 첫 번째로 비판할 점은 기초연금을 늘리면 후세대(손주세대)의 부담이 건잡을 수 없이 많아져 후세대가 경제적 파국을 겪을 것처럼 몰아가는 것임. 그러나 오건호박사의 발제문에도 논의되어 있듯이 70%의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해도 2050년에 기초연금총액은 GDP의 2.3%이고 여기에 국민연금지출 5.5%를 합해도 GDP대비 8%보다 적음. GDP 8%정도는 OECD 회원국이 2050년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11.4%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즉 미래세대(자식, 혹은 손주세대)가 부담해야 될 연금부담은 지금보다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늘려야 하나 마치 그 부담 때문에 미래세대가 경제적 파탄을 일으킨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표 1> 2050년 최대 고령화 인구 3개국

	2010		2050	
	공적연금 GDP(%)	65+인구(%)	공적연금 GDP(%)	65+인구(%)
Italy	15.3	20.3	15.7	33.6
Japan	9.7	23.0	13.7	38.8
Korea	0.9	11.0	7.9	37.4
OECD 28	8.4	14.7	11.4	27.7

- <표 1>을 보면 2050년에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비율은 37.4%로 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가 되며 이탈리아가 3위를 차지함. OECD 평균노인비율은 27.7%임. 이 수치는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노인인구는 10% 포인트가 더 많은데 공적연금으로 지출되는 자원의 총량은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함. 즉, 지금의 젊은 세대 혹은 손주세대들이 앞으로 부담해 될 공적연금의 몫(조세+연금보험료)이 충분히 부담 가능한 수준이며 기초연금액을 삭감할 경우 지금의 청년세대의 노후마저 불안하다는 것임.
- 두 번째는 공적연금은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다는 가정 하에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것임. 가령 연금의 장기재정추계나 혹은 정부의 장기경제전망에서 모두 실질임금상승률을 2-3% 내외로 설정하는 것은(오건호박사 발제문 7쪽 <표 5>) 시간이 지날수록 즉, 미래세대일수록 과거세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가처분)소득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미래로 갈수록 실질소득이 감소한다는 것은 발전도 없고 경제가 더 축소된다는 것으로 이는 연금 문제이전에 사회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임. 따라서 미래세대의 소득수준이 점 점 더 높아진다면 이들이 부담하는 연금의 부담이 미래세대의 막대한 짐이 되는 것은 더욱 아님.
- 그리고 셋째, 현재의 30-50대 세대가 지금의 노인들을 위해 사적인 부양을 하고 (가족단위의 생활비 지급) 자기 자신의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이중부담’ double payment 문제를 고려한다면 사적인 노인부양부담이 현세대보다 줄어드는 미래세대는 노인부양의 세대간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금에 추가적인 부담을 할 필요성이 있음.
- <표2>는 2011년 현재 전체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의 가구당 평균액은 20.8만원인데 사적이전(자식들의 생활비 송금)은 26.7만원에 달함. 즉 현재의 30-50대 세대들은 부모들에게 공적연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적으로 생활비로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의 자식세대는 우리세대가 상당부분 공적연금을 받기 때문에 우리세대만큼 사적이전의 부담을 줄여둠. 따라서 공적이전 확대를 위한 일정한

미래세대의 부담이 불공평한 것은 아님.

<표 2> 노인가구의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 비교 (2011년)

	단독가구	부부가구	노인1인+동거인	노인2인+동거인	전체
공적이전소득	11.6	34.1	12.0	25.5	20.8
사적이전소득	27.3	32.2	12.9	24.4	26.7

- 넷째,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부과방식이 아닌 부분적립방식으로 시작하여 약 430조원의 기금을 적립해 두고 있음. 430조원 중 약 1/3에 해당하는 130조원이 현세대가 낸 보험료의 투자수익금임. 즉 현세대가 기금을 적립하는 부분적립방식의 재정운용을 택했기 때문에 130조원의 기금이 추가로 축적된 것이며 만약 현세대가 처음부터 부과방식의 연금제도를 시행했다면 130조원은 생기지 않았고 이 부담은 고스란히 후세대의 부담으로 넘어갔을 것임. 즉,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체계가 일방적으로 후세대의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 아님.
- 결론적으로 공적연금에 대한 미래세대의 추가적인 부담은 늘어날 필요가 있으나 그 절대적인 비중은 후세대의 경제적 파국을 몰고 올 정도가 아님.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부담은 다른 국가에 비해 결코 크지 않으며 오히려 부담이 적은 것이라 할 수 있음.
- 공적연금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이 크지 않다고 하여 현세대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혹은 미래세대로의 불필요한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될 것임. <표 3>은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복지비 지출의 장기추계임. 이 표에 의하면 한국은 2040년에 가서야 2010년경의 유럽수준의 복지비를 지출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즉, 2040년 이후에도 미래세대가 조세와 사회보험료로 부담해야 될 복지비용의 절대적인 크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커지거나 파국적인 상황이 아님.

<표 3> 한국의 복지비지출 장기 추계

구분	1980	1990	2000	2009	2013	2030	2040	2050	2060
스웨덴	27.1	30.2	28.4	29.8	-	-	-	-	-
덴마크	24.8	25.1	26.4	30.2	-	-	-	-	-
프랑스	20.8	25.1	28.6	32.1	-	-	-	-	-
독일	22.1	21.7	26.6	27.8	-	-	-	-	-
영국	16.5	16.7	18.6	24.1	-	-	-	-	-
미국	13.2	13.6	14.5	19.2	-	-	-	-	-

일본	10.3	11.1	16.3	22.2	-	-	-	-	-
한국	-	2.8	4.8	9.6	9.8	17.9	22.6	26.6	29.0
OECD평균	15.5	17.6	18.9	22.1	-	-	-	-	-

- <표 4>는 정부가 추정한 복지비 지출 중 일반재정(조세)로 부담해야 될 몫과 사회보험료로 부담해야 될 몫을 비교한 것임. 2050년에 사회보험의 지출이 GDP의 21.1%에 이르는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몫을 약 8%로 잡는다면 나머지 13.1%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몫임. 이 중 건강보험의 비중이 가장 클 것은 당연한 것임(정부는 보험료 지출비중을 밝히지 않았음).

<표 4> 사회복지비 지출의 일반재정 및 사회보험 비중

구분	2013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일반재정분야	3.5(35.4)	3.8(29.6)	4.6(25.6)	5.1(22.5)	5.4(20.5)	5.7(19.8)
사회보험분야	6.3(64.6)	9.1(70.4)	13.3(74.4)	17.5(77.5)	21.2(79.5)	23.2(80.2)

-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30-50년 뒤 우리의 자식 혹은 손주세대가 복지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담하는 조세와 사회보험료 중에서 건강보험의 몫이 연금보다 클 것이라는 것을 의미함. 더욱이 건강보험은 비급여와 민간보험의 비중이 매우 크고 보장성이 약하기 때문에 가계부문에서 직접 부담해야 될 몫이 큼. 즉, 후세대의 복지비 과중한 부담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과 관련된 지출(건강보험+노인요양보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현세대가 진정 미래세대의 막대한 세금부담과 복지비부담을 걱정한다면 공적 연금을 개혁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유발적인 건강보험과 민간공급위주의 의료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임. 즉 비용절약적인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모든 역량을 모으는 것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걱정해야 하는 우리세대의 자세일 것임.
-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은 노후의 최저생활보장이라는 공적연금의 존재의의를 무력화시키고,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역차별하여 성실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공적연금의 정치적, 국민적 신뢰를 떨어트리는 최악의 개정안임.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액을 연동하여 지급하는 안은 포기되고 철회되어야 함. 설사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법안의 여러 가지 독소조항과 극심한 노인빈곤문제 때문에 앞으로 다른 정부에서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은 폐기되거나 크게 수정될 것임.

국민연금보장성 및 노후소득보장체계 악화를 유도하는 박근혜 기초연금안

제갈현숙 /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1. 박근혜의 복지정치 활용법: 거짓과 사기의 정당화

1) 복지 활용의 변화

- 2007년도 대선 예비후보였던 박근혜의 줄푸세-세금과 정부 규모는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공약을 전면
에 내세웠음
- 2010년 말부터 전향적인 태도 변화. 시혜적이고 선별주의적인 국가복지의 태
도를 고수했던 보수주자가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복지요구를 국가가 책임져
야 한다는 내용의 한국형 복지국가 제시
 - 2010년 12월 20일 박근혜 주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
청회」 개최. 이듬해 2월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발의,
그 해 연말 국회통과. 사회보장기본법은 2012년 초반 전면 개정 공포
되어,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
 - 박근혜와 결집된 보수층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치적인 시동은 복지에
대한 새로운 전략구상에서 시작됨.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의 주요 배

경은 소득보장 중심의 전통적인 복지국가 존립은 위험하기 때문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보장형 복지국가’로 전환

○ 2011년 지방선거 및 서울시장보궐선거를 통해 기존 보수 세력의 시혜적이고 잔여적인 복지정책으로는 2012년 재집권 달성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 이름

- 스스로 비판하고 부정하려했던 국가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역설하되, 그 내용은 시민권을 기반에 둔 복지국가로의 발전이 될 수 없었음
- 수사학적으로는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득보장체계를 경계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정책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불평등해소 보다는 개인의 역량강화 및 여전히 시장과 경제에 친화적인 복지전략으로 구성

○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양적으로 공약했던 다양한 복지 사업을 뒷받침할 재정 계획의 부재, 인수위 출범 이후 1년간 지속되어 온 공약파기 등을 통해 박근혜 복지정치의 본질은 민주주의를 통해 형식적인 완결성을 갖는 정권 창출을 가능케 했던 수단이었을 뿐, 복지정치는 보수 본연의 태도로 회귀

- 군사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찬탈했던 박정희정권과 정권 창출의 형식적인 차이 존재. 그러나 복지를 바라보는 태도와 철학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유사함. 박정희정권은 정권 폭력을 동원한 정권 찬탈에 대한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한 일련의 사회입법을 단행함. 그러나 실제 국민 삶과 연결된 그 어떤 제도를 시행하지 않음. 단, 군인 및 공무원에 대한 일련의 복지입법을 시행함. 이는 박정희 정권을 지탱할 주요 국가 세력으로 정권강화 차원에서 복지를 수단적으로 활용함. 이러한 특수직역에 대한 조합주의적 사회정책은 오늘날까지 사회통합에 장애가 되는 요소로 부정적인 작용을 함.
- 박근혜는 선거 시기 정권출범이후 결코 시행할 계획이 없었던 공약으로 복지정책을 호도하면서 민심을 얻는데 부분적으로 성공함(대선 득표결과 1.6% 더 획득). 정권출범이후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미래세대 부담축소와 같은 논리를 내세워 공약파기를 정당화함. 자신을 선택한 노인세대에 대해서만 현재보다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정책 유지. 이러한 점에서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수단정로만 복지정책을 취급함.

- 고전적 자유방임주의가 최소국가를 지향했고, 권위주의적 보수주의는 규범적 차원에서 간섭을 중요시하는 강한국가(strong state) 추구. 대처리즘은 사회적 시민권의 자리에 사적 소유와 시장참여로 표상되는 신자유주의적 시민권을 대치시킴. 이러한 토대 위에서 신자유주의 성장, 그 결과 전 지구적으로 사회의 불평등 심화. 신자유주의 정치가들은 이전 그들의 정치적 수사인 신자유주의만이 여전히 살 길이라고 고집하기 어려워졌고, 박근혜와 집권세력 역시 이러한 이유로 보편적 복지처럼 보이는 복지전략을 구사했지만 박근혜가 염원하는 것은 강한국가이지 시장의 모순을 책임지는 복지국가가 아님.
- 평가: 박근혜와 보수세력이 기존 한국의 보수논리에서 진화된 복지국가 패러다임을 준비하고 전개시켰던 중요한 요인은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적 목적과 신자유주의 폐단으로 빚어진 국민들의 분노를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성의 대두에 기인된. 그러나 그들의 생활보장국가에서 시작되어 맞춤형복지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기초와 방향은 신자유주의 복지전략과 유사함
 - 사회불평등의 원인을 개인의 능력차에 기인된다는 지극히 자유주의적 관점 유지
 - 조세를 통한 소득이전에 대한 효과를 비용유발적 복지로 전제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책임은 최대한 회피하면서 시장을 기반에 둔 서비스 확대로 소득보장기제 대체
 - 표면적으로 제시된 생애주기별 모든 욕구의 실체는 특정 시기, 일부 욕구에 대해서만 포괄할 뿐 결코 전 국민을 보편적으로 포괄할 수 없음
 - 국가는 자본의 책임은 묻지 않지만 여전히 가족과 개인의 책임을 중요하게 훈육한다는 측면에서 권위주의적 규범차원의 강한 국가
 - 강한 국가를 염원하는 박근혜 정부는 시장화 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유지 확대할 계획이고 확대된 시장을 토대로 저부가가치의 일자리 창출 매개로 MB정권에 이어 일을 통한 복지를 계승
 - 공공재 및 공적 영역의 영리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주도, 민간보험회사 성장 전략 꾸준히 추진 중

2. 박근혜 기초연금 정치의 결과

1) 거짓 공약의 정당화

- 전체 노령층에 대한 기초적인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빈곤 완화하겠다는 프레임 깨기
-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원칙의 혼선야기, 이로 인한 민간 금융 시장으로의 이동 촉진 효과 기대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부적절한 제도연계는 제도에 대한 불신 증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제도는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 약화,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후퇴시키며 분배의 정의를 왜곡시킴.

2) 박근혜의 기초연금 사기공약의 제도화 과정

- 박근혜 기초정치의 4단계 변천과정: ‘대통령선거 공약시기-인수위시기-행복연금위원회 시기-정부의 최종안 확정 및 국무회의 의결’
 - 공약파기의 과정에서 보수주의자들의 논리: ‘잘못된 공약은 빨리 수정돼야 한다’ 혹은 ‘잘못된 공약은 파기되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내세워 자기 부정의 과정을 떳떳하게 수행→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선거정치의 무의미함 실현
 - 스스로 자기부정과 정치의 무의미성을 사회복지 아젠다 내에서 확장시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제 막 성장하고 확대되기 시작한 복지담론과 복지정치에 대한 불신조장→ 말잔치뿐인 보수의 복지정치를 완성

<표 1>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안의 주요 변화과정

정치적 환경	기초연금의 정책적 주요 내용
대통령 선거 공약 2012. 12	- 기초연금은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 지급 - 기초노령연금법의 기초연금법 전환(2013년)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국민연금법 법률 개정 추진
18대 대통령인수위 2013. 01-02	- 소득하위 70%: 무연금자 20만 원(A값 10%)/국민연금 수급자 14만~20만 원(A값 0~3% 중복조정) - 소득상위 30%: 무연금자 약 4만 원(A값 2%), 국민연금 수급자 4만~10만 원(A값 0~3% 중복 조정)

행복연금위원회 2013. 03-07	-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음 - 기초연금 대상자는 노인의 70%(소득기준 또는 인구기준) 또는 80% 수준 - 연금액은 최고 20만원(A값의 10% 수준)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지급 - 차등지급하는 경우 기준은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으로 함 - 기초연금의 지급 시기는 2014년 7월로 한다.
최종정부안 및 국무회의 의결 2013. 09-11	- 소득하위 70%미만(공무원·사학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 $(20\text{만원} - \frac{2}{3}A) + 10\text{만원}$: 최소 10만원, 최대 20만원 - 조정계수 2/3 법률로 명시 -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확정, 부가연금액을 이에 1/2로 명확화 - 기준연금액 물가상승률과 A값 상승률 등 고려해서 5년마다 적정성 평가

3) 기초연금 정부안의 문제점

- 보편성을 대신한 시대착오적인 ‘선별-차등’의 오류
- 공적연금(기초연금+국민연금)의 기반 약화
- 기존제도(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후퇴된 제도 도입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에 따른 문제점
 -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역차별
 - 미래세대 기초연금 삭감
- 기초연금 실질 가치의 점진적 하락
- 사회통합에 반하는 사회정책: 국민연금 가입자 VS 비가입자, 노인소득 30% 이상 VS 노인소득 70%이하, 현세대 노인 VS 미래세대→소득계층별, 세대별, 사회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른 복잡한 이해관계로 따른 사회갈등 예견

3. A값과 기초연금 통합관리의 문제점

1) 국민연금 급여 현실 외면

- 국민연금 감액을 논하기 어려운 저수급률과 저급여의 현실
 -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수급자 2011년 12월 기준 총 2,460천명, 이중 2/3(1,604천명)가 특례노령연금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27.7%

- 노령연금 평균수급액은 월28만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 특례수급자의 수급액 19만원. 2011년 A값은 1,824,109원으로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 수중은 A값의 약 15%수준. 즉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월액 대비 국민연금 급여율 수준은 단 15%. 평균 수급액 중 A값의 10%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65%수준에 이름. 정부안이 A값을 조정하려는 의도는 결국 A값 자체만의 축소라기보다는 전체 국민연금 급여축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함

<표 2> 노령연금 수급자 및 월평균 수급액(2011.12월/단위: 명, %, 원)

구분		계	완 전	감 액	조 기	특 례	분 할
총수급자 (%)		2,459,690	81,897	523,890	243,696	1,604,151	6,056
		100.0	3.3	21.3	9.9	65.2	0.2
수급액 (원)	최고	1,342,110	1,342,110	1,200,620	1,233,150	894,640	579,520
	평균	281,610	791,490	408,600	446,410	191,470	146,120

주 : 해당월 지급자의 기본 + 부양가족연금월액 기준임. 재직자최고 평균 수급액 489,780원(최고

수급액1,136,180원) 총수급액평균에 포함됨

자료 : 국민연금공단(2012), 2011.12월말 국민연금 사업통계(안), 2012.2.

<표 3> 연금종별 월평균지급액(2011.12월/단위: 원)

구분	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소계	1급	2급	3급	
최고	1,342,110	1,342,110	1,267,910	1,267,910	1,021,620	840,610	735,730
평균	276,710	281,610	397,030	543,010	430,830	334,270	231,340

주 : 해당월 지급자의 기본 + 부양가족연금월액 기준이며, 중복급여조정자 및 동순위자는 조정전 금액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2012), 1011.12월말 국민연금 사업통계(안), 2012.2.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A값에 대한 가입자 비가입자 간의 조정을 논하는 것은 보수주의의 형평성에 대한 자기 부정과 더불어 국민연금 저급여 현실을 고착화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파악되지 않음

2)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와 공단의 왜곡된 시각

- 공적연금 수급률로 보장되지 않는 노후소득의 급여수준 외면

- 65세 이상 인구 중 공적노후보장급여 수급자 비중 추이: 2005년 30.9%(1,356천명)→11년 82.4%: 4,670천명(67%)으로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시행으로 공적연금 수급률 증가

<표 4>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 규모('11. 12월)

65세 이상 노인 수	공적연금 수급률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5,700천명 (100.0%)	4,670천명 (82.4%)	3,818천명(67.0%)	1,577천명(27.7%)	220천명(3.9%)
기초노령연금과 공적연금 중복 수급자 : 916천명(16.1%)				

* 국민연금도 자료 일관성 차원에서 65세 이상자만 대상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내부조사자료

-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해 3층 보장체계가 구축됐다고 평가하면서 국민 연금이 전체 경활인구의 약 80%를 포괄하는 노후보장 기본 축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함. 그러나 실제 국민연금의 포괄성은 단 27.7%. 기초노령연금의 포괄성으로 공적연금의 포괄성이 증대됨. 표면 적으로 공적연금의 포괄성은 증대했지만 노후소득보장의 실질적 기능 측면은 외면되고 있음

3) 국민연금의 어두운 전망

- 현재 국민연금 평균 급여수준은 A값의 15% 수준, 2050년이 되어도 그 수 준은 20-25%.
 - 이렇게 볼 때 A값의 10% 균등부분의 유지는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지 탕해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 A값은 2008년 1,676,837원, 2009년 1,750,959원, 2010년 1,791,955원, 2011년 1,824,109원, 2012년 1,891,771원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인상
 - 균등부분 이외 소득비례부분의 장기 성장은 비율적으로 최대 10%수준 에 머물

<표 5>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과 급여액 변화 추이(경상가격 기준, '08년 국민연금연구원자료 인용)

연 도	2007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평균가입기간(년)	10.6	15.1	16.9	19.1	20.8
평균연금월액(원)	275,000	387,000	745,000	1,246,000	2,013,000

주 : 평균가입기간 및 평균연금월액: 당해 연도 신규 노령연금수급자 기준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연금급여현황, 2013.3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역시도 2015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하락해서 22%수준에서 머물게 됨. 그러나 수급자의 수는 상대적으로 증대해서 2040년 이후 65세 이상 인구 중 절반이상이 수급자가 됨. 그러나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적용할 경우 대상자의 포괄성이 공적연금 급여의 하락을 촉진시키는 아이러니 발생함.

<표 6> 국민연금 수급자 규모와 평균소득대체율 추이

	평균 소득대체율	노령연금/65+인구	장애연금_65+수급 자/65+인구	유족연금_65+수급자/6 5+인구
2013	25.4	27.6	0.3	4.2
2015	25.3	27.7	0.3	5.1
2020	24.7	29.7	0.5	7.4
2025	24.1	34.1	0.6	8.8
2030	23.7	39.7	0.7	10.3
2035	23.4	45.7	0.7	11.6
2040	23.1	52.1	0.8	12.7
2045	22.8	58.3	0.8	14.0
2050	22.7	63.1	0.7	15.0
2055	22.6	66.9	0.7	16.1
2060	22.6	69.3	0.7	16.1

주 1: 2008년 재정계산 장기추계모형 사용, 국민연금연구원 추계(2013)

주 2: 소득대체율은 해당년도의 특례, 재직자노령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최초연금월액과 생애평균소득월액(B값)의 비율로 계산한 것임.

-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가입기간 적용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과 더불어 기초 연금액을 물가연동에 적용함으로써 2036년 이후 5%로 감액, 2061년 3%까지 축소시키는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 악화와 국민연금급여 악화를 동시에 가져오게 됨

정부 여당이 제안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4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김용익 / 민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 20만원 7월 지급이 불가능한 것인가? 아니다

정부여당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면 새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도 만들고 지침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전산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여당의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커녕 갈수록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니 7월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민주당 방식으로 하면 현행법을 한 조항만 개정하면 복잡한 준비가 없어도 된다. 예산도 5조2천억 원이 마련되어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7월 지급의 위기는 민주당 때문이 아니다. 정부여당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생기는 것이다.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지 말라.

2. 그러면 정부여당의 방식이 유일무이한 것인가? 아니다.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10-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20만원을 균등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그 둘 사이에는 무수한 대안이 가능하다.

정부여당의 방안을 반드시 추진하려면 그 방안이 다른 방안에 비해, 특히 야당의 방안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수한 것이라는 증명이 필요하다. 그래야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정부여당 방안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이유가 생길 수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자신들의 방안이 (1) 사회정의에 맞고, (2) 미래세대가 겪을 재정위기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런가?

3-1. 정부여당의 방안은 사회정의에 맞는가?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자체의 재분배 기능이 있어 이미 혜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2중 혜택’이라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현재 받고 있는 10만원은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에 따라 10만원까지 감액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이 성숙되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10만원, 미가입자는 20만원으로 양분될 것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까지 모두 해소되면 기초연금은 모두 10만원으로 귀결된다.

민주당의 방안은 국민연금과는 무관하게 20만원을 균등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사각지대까지 모두 해소될 때, 기초연금은 모두 20만원으로 귀결된다.

어느 쪽이 더 사회정의에 맞는가? ‘국민연금+10만원’ 방식은 사회정의에 맞고 ‘국민연금+20만원’ 방식은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것인가?

3-2. 2007년 여야 합의의 파기이자, 최소의 복지 후퇴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과 함께 태어났다. 20년 후인 2028년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20% 포인트를 낮추는 대신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설하여 그 중 10%를 다시 올려 주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의 방안은 그 10%를 다시 5%로 낮추자는 방안이다.

2007년 합의의 파기이고,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복지 수준의 후퇴이다. 노후소득의 부족을 악화시키고, 그동안 역대 정부가 꾸준히 늘려가던 복지 수준을 도로 낮추는 나쁜 사례가 될 것이다. 이것이 사회정의에 맞는가?

4. 미래세대에 정말 부담이 되는가? 아니다.

정부여당의 기초연금 방안에 따르면 고령화 정도가 최고조에 이르는 2060년 재정소요는 228조, GDP대비 비율은 2.4%이다. 민주당 방안에 따르면 264조, 2.8%이다. 36조, 0.4% 차이이다.

과연 2.4%를 부담하는 방식은 국민경제를 건전하게 하고, 2.8%를 부담하는 방식은 국민경제를 파탄시킬 것인가? 정부여당 방식으로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으면 민주당 방식으로도 살아남을 것이고, 민주당 방식으로 망할 것이면 정부여당 방식으로도 망할 것이다. 무슨 근거로 정부여당 방식은 좋고 민주당 방식은 나쁘다고 하는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을 합한 공적연금부담은 정부여당 방식으로 9.2%, 민주당 방식으로 9.6%이다. 이는 현재 서구 경제가 부담하는 공적연금부담액을 밑도는 수준이다. 과연 서구 경제는 공적연금으로 파탄 나 있는가?

정부·여당의

기초연금에 대한 4가지 질문

2014. 3. 12



국회의원 김용익

기초연금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20만원 7월 지급이 불가능한가?

아니다

1. (정부여당) 기초연금법 제정- 신규 입법

사회적합의

법제정 → 시행령제정 → 시행규칙제정

전산시스템 구축

시간이 오래 걸림

2. (민주당)기초노령연금법 개정 - 현행법

법개정

즉시 시행가능

기초연금, 정부 새누리당안은 유일무이한 방안인가?

아니다

(정부여당)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10만원~20만원 차별지급

무수히 많은 방식이 가능

(민주당) 국민연금과 별도로 20만원 균등지급

정부, 새누리당안은 사회정의에 맞는가?

아니다



정부여당안

민주당안

사각지대가 모두 해소된 후에는...

모든 노인



정부여당안

모든 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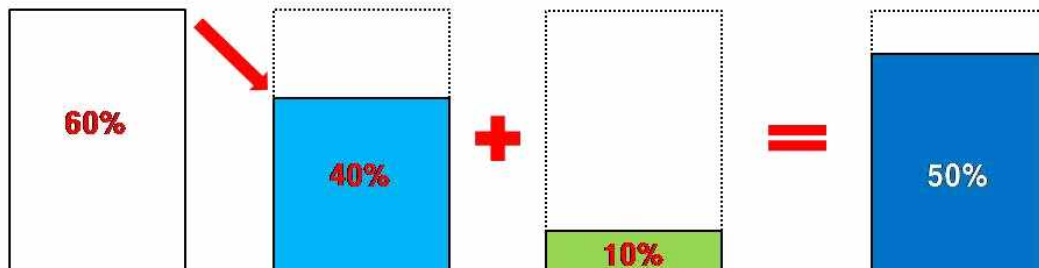


민주당안

2007년 사회적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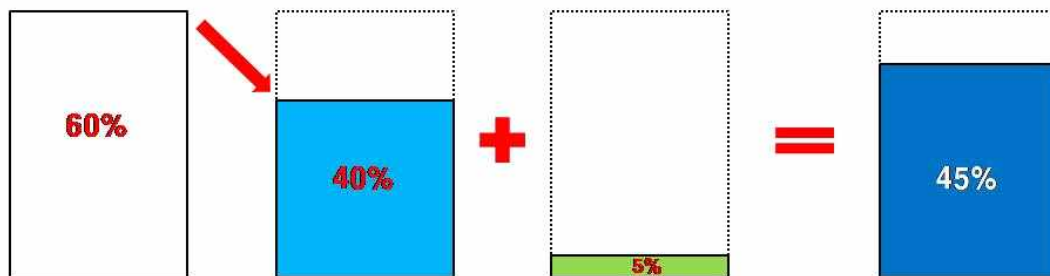
국민연금은 낮추고

기초노령연금은 신설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5%로 삭감” – 정의로운가?

2007년 사회적 합의 파기



“고령화, 노인빈곤에도 복지 후퇴 – 정의로운가?”

민주당안은 미래세대에게
정말 부담이 되는가?

아니다

	2060년 재정소요	GDP대비 비율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정부안	228조	2.4%	9.2%
민주당안	264조	2.8%	9.6%



[기초연금 ‘오해와 진실’ - 민주당 보건복지위원]

-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20만원을 드릴 수 있습니다! -

Q.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7월 지급이 어렵다고 하는데 맞나요?

A. 민주당이 제시한 방안으로 하면 당장 지급도 가능합니다. 정부처럼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또 민주당은 지난해 이미 5조2천억원의 기초연금 예산도 통과시켰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이 어려운 것은 “자기 법은 단 한글자도 고칠 수 없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옹고집 때문입니다.

Q. 국가가 돈이 없어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면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A. 네, 그래서 민주당도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 지급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면 80%까지는 지키라고 했고, 정 그것도 어렵다면 최소한 70%까지는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Q. 민주당 주장은 고소득 노인도 혜택을 보는 것 아닌가요?

A. 고소득 노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정부·새누리당 방안 모두 65세 이상 노인의 70%까지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민주당안도 정부·새누리당안과 같이 중산서민층 이하 노인에게만 연금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새누리당 방안은 10~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것인 반면, 민주당안은 20만원을 균등지급하자는 것입니다.

Q. 재정에 부담이 된다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A.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은 무수히 많은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 보는 제도를 고집하면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려 하겠습니까? 또한, 2007년에 국민연금 수령액을 1/3 깎으면서(소득대체율 60%→40%) 연금가입자에게 20만원(10%)을 기초연금으로 보충해 주기로 정부와 여야가 합의까지 하고 이제 와서 10만원(5%)만 주겠다는 것은 명백한 합의 파기이자 국민연금가입자를 두 번 울리는 일입니다.

Q. 민주당의 주장은 나라를 빚더미에 앉히는 과도한 요구 아닌가요?

A. 민주당안과 정부·새누리당안의 재정부담 차이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노인인구가 절정이 되는 2060년의 경우에조차 GDP의 2.4%(정부·새누리당안)와 2.8%(민주당안)로 재정부담 차이가 0.4%에 불과

합니다. 0.4% 때문에 한국경제가 파탄 나겠습니까? 정부·새누리당안대로 하면 경제에 아무 문제가 없고 민주당안대로 하면 경제가 파탄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Q. 민주당안대로 하면 후세대의 세금부담이 과도해진다는데?

A. 민주당안은 후세대의 부담이 커지는게 아니라, 혜택이 많아져 부모 부양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2060년에 가면 민주당안은 정부안보다 1인당 세금이 81만원 더 들기 때문에 부담이 과도해진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060년에는 돈의 가치가 달라져서 기초연금이 2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이 되기 때문에 혜택이 더 큰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정부안대로 하면 1,200만원만 받게 되지만 월 67,500원(연 81만원)만 더 내면 차별 없이 연 2,4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 민주당 방안입니다.

Q. 민주당안대로 하면 젊은 세대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 아니냐?

A.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안은 현재의 젊은 세대에게 이중 피해를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안은 현재의 청장년층이 노인세대에 대한 기초연금을 책임지지만, 정작 그들이 노인이 되면 기초연금을 반으로 깎아 10만원만 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기초연금안의 세 가지 불편한 진실 청장년층 손해 보는 기초연금

남윤인순 / 민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 정부 기초연금안의 세 가지 불편한 진실

- ① 애초부터 기초연금 공약은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이었음
- ② 기초연금액, 8년 후면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줄어듦
- ③ 보편주의 기초연금 도입 시 재정을 감당하지 못할 것

2. 청장년층 손해 보는 기초연금제도

1) 연금인상 기준 변경으로 인한 손해

○ 소득연동(기초노령연금) -> 물가연동(기초연금)

-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직전 3년 평균소득(A값)의 5%로 A값 증가와 연동하여 인상됨
- 기초연금은 A값이 아닌 물가에 따라 연동되며, 5년에 한 번씩 재조정 될 예정임.
- 지난 10년 평균 A값 상승률은 3.9%이며, 물가 상승률은 2.9%임. 또한 지난 10년간 A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낮았던 경우는 3번 밖에 없음(2008년, 2010~2011년)

<표 1> A값 및 물가 상승률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0년 평균
A값 변동률	6.99	6.047	4.59	3.34	3.58	4.42	2.34	1.79	3.71	2.34	3.92
물가 상승률	3.6	2.8	2.2	2.5	4.7	2.8	3.0	4.0	2.2	1.3	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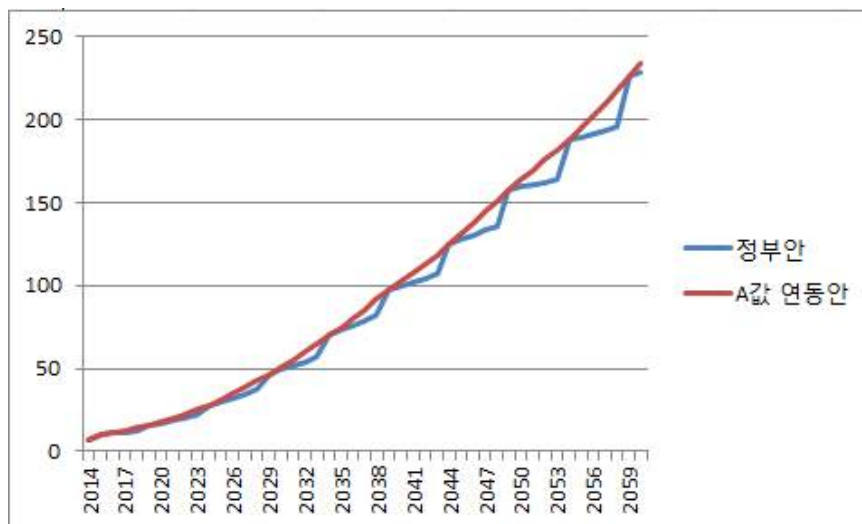
- 또한, 국민연금 연구원의 장기 재정추계 수치를 보면, 2050년까지 물가상승률은 평균 2.5%로 소득증가율 5.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기초연금 상승을 A값 상승률이 아닌 물가상승률로 변경한 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꼼수임.

2) 실제 5년 단위 기초연금 재조정 불가능에 따른 손해

○ 현 재정정책으로는 5년 단위 급격한 예산증가 불가

-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할 예정이며, 매 5년마다 A값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 정부안처럼 2014년부터 기초연금을 시행하고 5년 단위로 기초연금을 보정하게 될 경우 기초연금 예산이 매년 1조 안팎으로 증가하다 5년 단위로 급격히 증가하게 됨.

<그림 1> 정부안과 A값 연동안에 따른 기초연금 예산 증가 추이



- 2019년에는 3.7조(A값 상승률 1.7조), 2024년에는 6.3조(A값 상승률 2.9조), 2029년에는 9.7조(A값 상승률 4.1조), 2034년에는 12.9조(A값 상승률 5조)로 급격히 상승을 하게 됨.
- 현재의 예산 실링제에서는 한 제도의 예산이 갑자기 6조, 10조, 13조가 증가하는 것이 불가능함.

<표 2> 정부안과 A값 연동안에 따른 예산 증액 내역

(단위: 조원, 경상가 기준)

	정부안 (물가상승률+매 5년 보정)		A값 연동 (A값상승률)	
2014	7.0		7.0	
2015	10.3		10.4	
2016	10.9		11.5	
2017	11.4		12.8	
2018	12.3	3.7	14.3	1.7
2019	16.0		16.0	
2023	21.8	6.3	25.2	2.9
2024	28.1		28.1	
2028	37.0	9.7	42.6	4.1
2029	46.7		46.7	
2033	56.9	12.9	64.8	5
2034	69.8		69.8	
2038	82.1	15	91.6	5.5
2039	97.1		97.1	
2043	106.9	17.7	118.7	5.9
2044	124.6		124.6	

- 또한 5년 단위로 보정을 할 경우 기초연금액을 살펴보니 정부안대로 물가연동을 할 경우 2014년 20만원이었던 기초연금액은 2018년 22.4만원이 되어 A값 연동 시(25.8만원)보다 3.6만원 적게 받게 됨.
- 이렇듯 정부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 국민들에게 연금을 적게 주는 방안을 택하였으며, 5년 단위로 기초연금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5년 단위로 A값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재조정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 결국 5년 단위 기초연금액 재조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임기 중에만 어떻게 임기응변식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해 놓고 5년 후에는 나 몰라라 하기 위해서 쓴

꼼수임.

3) 청장년층이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아닌 기초연금을 수급했을 때의 기초연금액 손해

○ 현행 기초노령연금만도 못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분석한 ‘기초연금액 추계’에 의하면, 현 60세가 기대여명(수급년수: 18년)까지 살 경우 현행 기초노령연금 보다 기초연금을 91만원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 20세(수급년수: 22년)는 평생동안 현 기초노령연금보다 기초연금을 5,008만원 덜 받아,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될 경우 손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수급연수: 현재 나이+기대여명-65(기초연금 수급 시작나이)

- 현행 기초노령연금(2028년까지 A값의 10%로 인상)과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액에 따른 연령대별 손해액을 살펴본 결과 현 55세(수급년수: 19년)는 665만원, 현 45세(수급년수: 20년)는 1,419만원, 현 35세는 2,374만원, 현 25세는 3,892만원을 손해보는 것으로 나타나, 젊을수록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에 따른 손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표 3> 연령별 기초(노령)연금 총수급액 추정(단위: 천원)

생년	연령	수급 년수	수급 개시년도	수급 종료년도	기초 연금안 (a)	현행기초 노령연금 (b)	차이 (a-b)
1954	60	18	2019	2036	60,999	61,090	-91
1959	55	19	2024	2042	76,547	83,206	-6,659
1964	50	19	2029	2047	88,386	98,715	-10,329
1969	45	20	2034	2053	107,338	121,529	-14,191
1974	40	20	2039	2058	121,863	139,561	-17,697
1979	35	21	2044	2064	148,090	171,832	-23,742
1984	30	22	2049	2070	192,053	212,460	-20,408
1989	25	22	2054	2075	208,317	247,269	-38,952
1994	20	23	2059	2081	256,348	306,432	-50,084

주: 연금수급액은 NABO 물가상승율을 사용하여 2014년 불변가격으로 계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 50년 후 조세부담 들먹이며 국민을 협박하는 정부

- 문형표 장관은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시행할 경우 2060년에 국민 1인당 연간 81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한다고 주장.
- 2060년이 되면 한 달에 받는 기초연금액이 191만원이 될 것이라 예측됨. 한 달에 191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기 때문에 일 년에 81만원(월 6만7천원)의 세금이 부담스럽지 않을 것임.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지 않을 경우 2014년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연간 6천원으로, 한달에 500원만 조세를 더 부담하면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시행할 수 있음.
- 2015년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8천원에 불과하며, 2019년에도 9천원에 불과함. 만원도 채 되지 않는 것임.
- 생산가능인구 1인당 조세부담액은 2014년에 연간 8천원, 2019년에 연간 1만 3천원만 부담하면 됨.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아직도 먼 미래인 2060년 조세부담 이야기를 하며 국민들 협박하고 있음.

<표 4>기초연금에 따른 재정소요 및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

	기초 연금 액 (기준 연금 액, 만원)	재정소요 (조원, 경상가)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 (만원, 경상가)			생산가능인구 1인당 조세부담액 (만원, 경상가)			국민총소득 (십억원, 경상가)	물가 상승 률
		정부 안	70% 국민 연금 미연 계	100%	정부 안	70% 국민 연금 미연 계	국민 연금 연계 시 차액	정부안	70% 국민연 금 미연계	국민 연금 연계 시 차액		
2014	20.0	7.0	7.3	9.4	14.0	14.6	0.6	19.1	19.9	0.8	1,430,072	2.6%
2015	20.5	10.3	10.7	15.3	20.3	21.1	0.8	27.7	28.9	1.2	1,531,088	3.1%
2019	27.7	16.0	16.4	23.5	31.1	32.0	0.9	43.4	44.7	1.3	2,023,803	3.5%
2020	28.7	17.2	18.5	26.4	33.5	35.9	2.4	47.2	50.5	3.3	2,155,210	3.4%
2025	39.7	30.3	32.5	46.5	58.2	62.6	4.4	86.7	93.2	6.5	2,859,011	2.8%
2030	53.3	49.3	53.7	76.5	94.5	102.9	8.4	149.8	163.2	13.4	3,624,205	2.5%
2040	86.2	99.8	111.6	161.3	195.4	218.5	23.1	345.8	386.6	40.8	5,257,143	2.0%
2050	129.4	159.5	182.3	266.1	331.4	378.8	47.4	629.1	719.2	90.1	7,215,394	2.0%
2060	191.1	228.0	263.8	387.4	518.6	600.0	81.4	1,042.6	1,206.4	163.8	9,583,907	2.0%

* 정부안은 물가상승률 + 5년마다 보정, 그 외는 A값상승률로 인상/경상가 기준(현재 기준1/10)

4) 모든 세대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기초연금이 필요해!

○ 청장년층의 손해 감수를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

- 박근혜 정부의 주장처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할 경

우 국민연금에 장기가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청장년층의 손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측 됨.

- 정부 발표에 의하면 현 66세의 경우 국민연금을 12년 이상 가입할 경우 기초연금액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 36세 이하의 경우 국민연금을 16년 이상 가입할 경우 기초연금액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 세대별, 가입기간별 기초연금액(월)

가입 기간	66세 (1948년)	56세 (1958년)	46세 (1968년)	36세 (1978년)	26세 (1988년)	16세 (1998년)
10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1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2년	191,406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3년	181,42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4년	171,435	193,403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5년	161,449	185,165	196,399	200,000	200,000	200,000
16년	148,135	176,843	188,909	193,486	193,486	193,486
17년	134,821	166,858	181,337	186,746	186,829	186,829
18년	121,506	156,872	173,681	179,923	180,172	180,172
19년	108,192	146,887	165,943	173,016	173,515	173,515
20년	100,000	136,901	158,121	166,026	166,858	166,858

* 자료: 보건복지부

- 2007년 국민연금 개혁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60%(40년 가입기준)에서 2018년 45%, 2028년 40%로 떨어질 예정이며, 그 결과 현재 청장년층의 국민연금액은 현재보다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됨.
- 게다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할 경우 현 36세 이하의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16년 이상 가입할 경우 기초연금액이 삭감될 것임.
- 국민연금연구원에 의하면 수십년 후에도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남.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평균적으로 2020년 21.2%, 2030년 23.2%, 2040년 22.3%, 2050년 21.7%, 2060년 21.5%로 예상되는 것임.
- 현재 청장년층이 국민연금을 수급할 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1~23%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됨.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청장년층에게 더 큰 손해를 감수하라고 강요하고 있음.

○ 모든 세대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기초연금안은 폐기되어야!!!

-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현세대 노인빈곤을 완화한다는 미명하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만 집중한 개악안으로 현세대 노인도 손해를 보는 안임.
-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로 인해 청장년층의 노후가 흔들리고 있음.
- 박근혜 정부는 국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청장년층의 손해를 강요하는 기초연금 개악안을 철회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은 기초연금제도를 만들어야 함.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진.실

기초연금 긴급 정책 토론회

2014. 3. 12
국회의원 남윤인순



민주당

연금인상 기준 변경으로 인한 손해

소득연동(기초노령연금) → 물가연동(기초연금)

- 기초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직전 3년 평균소득(A값)의 5%로 A값 증가와 연동
- 기초연금 : A값이 아닌 물가에 따라 연동, 5년에 한번 재조정 예정
- 국민연금 연구원 장기재정추계 : 2050년 물가상승률 평균 2.5%, 소득증가율 5.2%

A값 및 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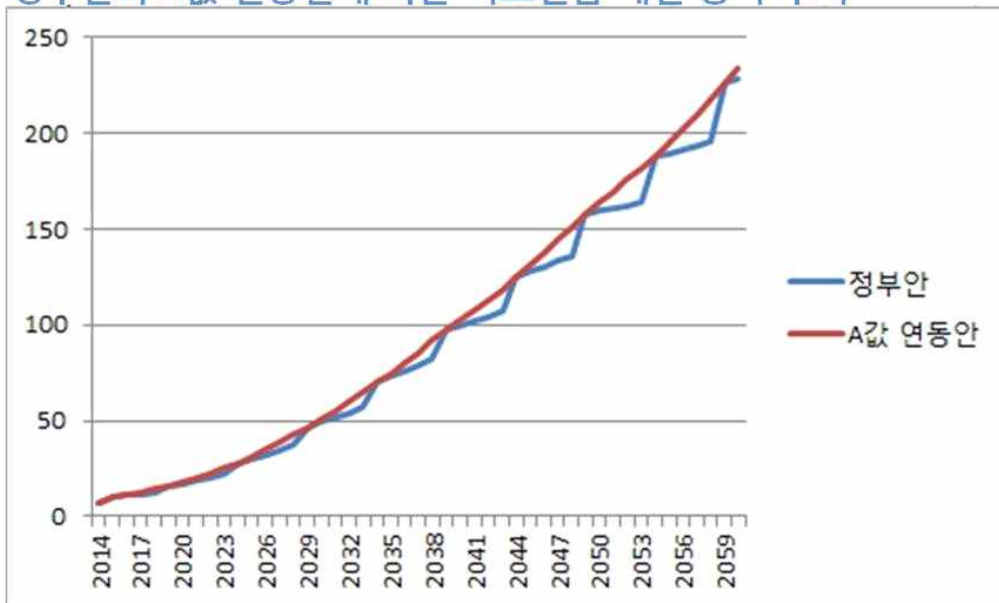
(단위 :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0년 평균
A값 변동률	6.99	6.047	4.59	3.34	3.58	4.42	2.34	1.79	3.71	2.34	3.92
물가 상승률	3.6	2.8	2.2	2.5	4.7	2.8	3.0	4.0	2.2	1.3	2.91

국회의원 남윤인순

실제 5년 단위 기초연금 재조정 불가능에 따른 손해

정부안과 A값 연동안에 따른 기초연금 예산 증가 추이



국회의원 남윤인순

청장년층이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아닌 기초연금을 수급했을 때의 기초연금액 손해

기초연금 예산추계 정부안(물가) · A값 연동 비교

	정부안 (물가상승률+매 5년 보정)	A값 연동 (A값상승률)
2014	7.0	7.0
2015	10.3	10.4
2016	10.9	11.5
2017	11.4	12.8
2018	12.3	14.3
2019	16.0	16.0
2023	21.8	25.2
2024	28.1	28.1
2028	37.0	42.6
2029	46.7	46.7
2033	56.9	64.8
2034	69.8	69.8
2038	82.1	91.6
2039	97.1	97.1
2043	106.9	118.7
2044	124.6	124.6

(단위: 조원, 경상가 기준)

국회의원 남윤인순

기초연금에 따른 재정소요 및 조세부담액

(단위: 만원)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 만원 월)	재정소요 (조원 경상가)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 (만원 년경상가)			생산가능인구 1인당 조세부담액 (만원 년경상가)			국민 총소득 (십억원 경상가)	물가 상승률
	정부안	70% 국민연금 미연계	100%	정부안	70% 국민연금 미연계	국민연금 연계 시 차액	정부안	70% 국민연금 미연계	국민연금 연계 시 차액		
2014	20.0	3천억원		14.0		6천원	19.1		8천원	1,431,072	2.6%
2015	20.5			20.3		0.8	27.7		1.2	1,531,088	3.1%
2019	27.7			31.1		9천원	43.4		1만 3천원	3,023,803	3.5%
2020	28.7			33.5		2.4	47.2		3.3	2,155,210	3.4%
2025	39.7			58.2		4.4	86.7		6.5	2,850,011	2.8%
2030	53.3			94.5		8.4	149.8		13.4	3,624,205	2.5%
2040	86.2			195.4		25.1	345.8		40.8	5,257,143	2.0%
2050	129.4			331.4		47.2	607.2		90.1	7,215,394	2.0%
2060	191만 천원			518.6		81만 4천원	1,436.6		163.8	9,583,907	2.0%

* 정부안은 물가상승률 + 5년마다 보정, 그 외는 A값상승률로 인상/경상가 기준(현재 기준1/10)

국회의원 남윤인순

현행 기초노령연금만도 못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연령별 기초(노령)연금 총수급액 추정

(단위: 천원)

생년	연령	수급 년수	수급 개시년도	수급 종료년도	기초연금안 (a)	현행기초 노령연금	차이
1954	60	18	2019	2036	60,999		9만원
1959	55	19	2024	2042	76,547	83,206	-6,659
1964	50	19	2029	2047	88,386	98,715	-10,329
1969	45	20	2034	2053	107,338	121,529	-14,191
1974	40	20	2039	2058	121,863	139,561	-17,697
1979	35	21	2044	2064	148,090	171,832	-23,742
1984	30	22	2049	2070	192,053	212,460	-20,408
1989	25	22	2054	2075	208,317	247,269	-38,952
1994	20	23	2059	2081	256,348		5천 8만원

주: 연금수급액은 NABO 물가상승율을 사용하여 2014년 물변가격으로 계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국회의원 남윤인순

청장년층의 손해 감수를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

세대별, 가입기간별 기초연금액(월)

가입 기간	66세 (1948년)	56세 (1958년)	46세 (1968년)	36세 (1978년)	26세 (1988년)	16세 (1998년)
10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1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2년	191,406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3년	181,42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4년	171,435	193,403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5년	161,449	185,165	196,399	200,000	200,000	200,000
16년	148,135	176,843	188,909	193,486	193,486	193,486
17년	134,821	166,858	181,337	186,746	186,829	186,829
18년	121,506	156,872	173,681	179,923	180,172	180,172
19년	108,192	146,887	165,943	173,016	173,515	173,515
20년	100,000	136,901	158,121	166,026	166,858	166,858

* 자료: 보건복지부

국회의원 남윤인순

토론문

이언주 / 민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종의 사회보험계약인데,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성실히 납부했다는 이유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받으라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역차별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음. 따라서 정부의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즉,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아울러 정부와 새누리당은 월 20만원씩 지급하면 미래세대의 부담만 늘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는 미래세대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그대로 받는 것으로 호도하는데, 부담이 줄어드는 것 보다 혜택이 더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 덜 내고 덜 받느냐, 더 내고 더 많이 받느냐의 개념 차이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주장임.

■ 정부의 기초연금법이 개악인 이유 4가지!

- 첫째,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로 성실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하기 때문.

※ 국민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 감액대상자 비중

– 2014년 30.7% → 2020년 50.5% → 2030년 54.2% → 2040년 59.8% → 2060년 67.5%


 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 현안보고

국회의원
 광명(을) 이연주


 민주당

국민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 추이

	기초연금 대상노인(70%)	무연금자 (전액)	국민연금 수급자(A)	감액 대상자		((B)/(A)×100)
				국민연금 수급자 중 감액대상자(B)	무연금자 중 감액대상자	
2014년*	3,910	2,920 (74.7%)	880 (22.5%)	270 (6.9%)	110 (2.8%)	30.7%
2020년	5,658	4,087 (71.9%)	1,571 (27.6%)	888 (5.7%)	28 (0.2%)	50.5%
2030년	8,884	5,830 (65.6%)	3,054 (34.4%)	1,444 (47.3%)	44 (1.5%)	54.2%
2040년	11,551	5,712 (49.4%)	5,830 (50.5%)	3,488 (30.2%)	58 (0.5%)	59.8%
2050년	12,594	4,118 (32.7%)	8,476 (67.3%)	5,478 (64.6%)	63 (0.7%)	64.6%
2060년	12,335	2,611 (21.2%)	9,724 (78.8%)	6,422 (66.1%)	42 (0.4%)	67.5%

* 2014년은 2012년12월 말 수급자 기준 / 단위 : 천명, %

○ 둘째,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

※ 40년 완전가입을 전제로 한 이론 소득대체율과 실질 소득대체율 조사



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 현안보고

국회의원
광명(을) 이연주

민주당

주요선진국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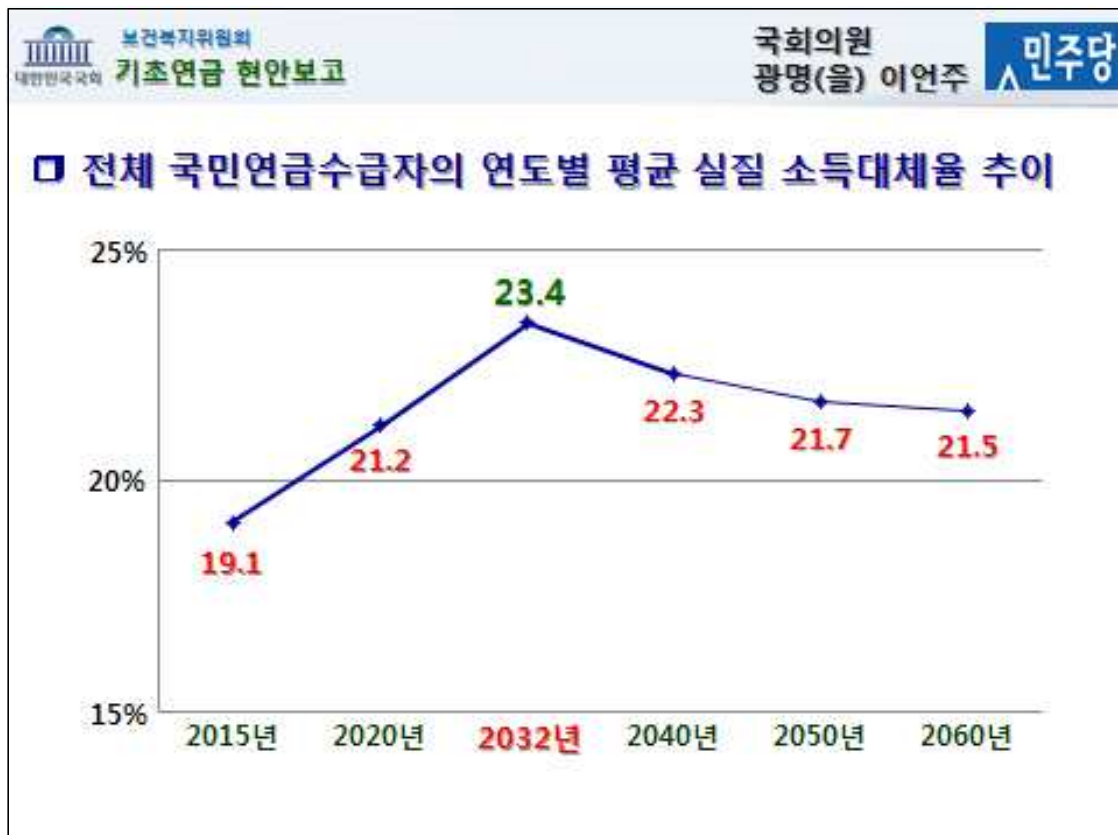
구분	일본(* 06)		미국(* 07) (비례)	독일(* 06) (비례)	영국(* 10) (기초)	캐나다(* 06) (기초+비례)	대한민국
	기초	후생					
이론적 대체율 ¹⁾ (A)	20.0	42.0	40.0	43.5	15.0	40.0	40.0
실수급자 대체율 ²⁾ (B)	16.5	37.5	33.1	26.8	13.0	26.2	22.7
B/A	82.5	89.3	82.8	66.2	86.7	70.5	56.8%

주) 1) 모두 40년의 완전가입을 전제로 한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
2) 전가입자 평균소득월액 대비 기존수급자의 월평균연금액의 비율

- 일본이나,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는 이론 소득대체율 대비 실질 소득대체율 이 66.2%에서 80% 후반대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2012

년 기준으로 실질소득대체율이 이론소득대체율의 56.8%에 불과함. 그나마 2012년 기준 실질 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1988~1998년은 소득대체율이 70%, 1999~2007년 60%로 높았기 때문.

- 하지만, 2007년 국민연금을 개혁하면서 이론 소득대체율을 2008년 50%,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사회적 합의. 향후 실질 소득대체율은 2032년 23.4%로 정점을 찍은 후 다시 21%대로 수렴될 것으로 예측됨.



-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기초연금법과 같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기초연금까지 감액시킨다면, 국민연금의 장기가입 유인이 사라져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은 더 낮아지고, 기초연금까지 감액되어 우리나라 노후공적소득보장제도는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임.

○ 셋째, 기초연금액을 물가상승률과 연계하고 5년 마다 조정하더라도 국민은 손해를 보기 때문임.(기초연금액 결정방식의 문제)

- 정부는 기초연금액을 A값에 연동하지 않고 물가상승률과 연동하고 5년 마다 기

초연금액의 적정성을 재평가한다는 입장. 하지만, 재평가를 하더라도 ‘A값 연동’과 비교하면 국민은 기초연금을 더 적게 받게 됨.

- 정부 제출 자료(A값의 10%와 ‘물가상승률 + 5년 보정’비교자료)를 보면, 2015년~2018년 사이에는 5천원~3만4천원 적게 받음. 2019년에는 재평가를 통해 A값의 10%로 금액이 동일해지지만, 다시 2020년~2023년 사이에는 1만원~4만5천원을 적게 받게 됨. 2024년에 재평가를 통해 다시 동일해지지만, 2025년~2028년 사이에는 1만3천원~5만8천원을 적게 받음. 이러한 과정에 반복되어 2055년~2058년 사이에는 최대 13만3천원을 적게 받게 되는 개악임.



기초연금 토론회

국회의원
광명(을) 이연주

민주당

□ 기초연금액 물가 연계하고 5년마다 조정해도 손해!

- 정부 제출 자료(A값의 10%와 물가상승률 + 5년 보정 비교자료)를 보면,
- 2015년~2018년 **5천원~3만4천원** 적게 받음 -> 2019년 재평가를 통해 A값의 10%로 금액동일 -> 2020년~2023년 **1만원~4만5천원** 적게 받음. -> 2024년 재평가 통해 다시 동일 -> 2025~2028년 **1만3천원~5만8천원** 적게 받음.
- 이런 과정 반복되어, 2055년~2058년 사이에는 **최대 13만 3천원** 적게 받는 개악!

○ 넷째, 정부의 기초연금법은 현행법상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가기 때문.

-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면, 2014년 51세 이하인 사람은 기초(노령)연금을 28년부터 20만원(A값의 10%)을 받을 수 있음.
- 하지만, 정부안대로 될 경우 연금이 최대 절반으로 깎이는 문제발생.
- 기초연금 수급자 중 20만원(A값의 10%) 전액을 받지 못하는 감액대상자 비중은 2014년 9.7% → 2020년 14.7% → 2030년 19.2% → 2040년 30.7% → 2060년 53.6%로 증가

- 이는 현행법으로 A값의 10%, 즉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고 반값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개악임.

▶ 기초노령연금법 부칙(2007.4.25.일) 제4조의2

제4조의2(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금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한다.



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 현안보고

국회의원
광명(을) 이연주

민주당

□ 현행법상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개악

<기초연금 수급자중 20만원(A값의 10%) 전액을 받지 못하는 감액대상자>

2014년 9.7% → 2020년 14.7% → 2030년 19.2%
→ 2040년 30.7% → 2060년 53.6%

<기초노령연금법 부칙(2007.4.25일) 제 4조의 2>

제4조의2(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금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한다.

○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려는 아집을 버려야

- 정부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후세대의 부담을 거론.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를 고수하기 위해서 민주당에 대상자를 75%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
- 하지만, 75%까지 대상을 확대할 경우 소요되는 재정은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 하위 70% 어르신께 차별 없이 20만원을 지급’하자는 안과 별반 차이가

없음.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고 대상을 75%로 할 경우 소요재정은 14년~17년까지 4년 동안 42.3조원으로 민주당의 40.7조원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감. 2030년까지도 52.7조원대 53.6조원으로 거의 같음.(이후에는 민주당안이 좀 더 예산이 더 들어가지만, 별반 차이 없음)
- 후세대 부담 운운하면서 국민을 호도하더니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라는 대통령의 아집을 지키려는 복지부의 모습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 현안보고

국회의원

광명(을) 이언주



□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소요재정 현황

	2014-2017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정부안(국민연금 연계)	39.6	17.2	49.3	99.8	159.5	226.0
정부안+75%	42.3	18.4	52.7	106.8	170.8	244.3
70% 20만원	40.7	17.8	53.6	111.6	182.3	263.8
기초노령연금	26.9	13.7	53.6	111.6	182.3	263.8

단위 : 조

단위 : 조

■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으로 20만원 지급 가능

-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3월10일까지 ‘기초연금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국민과 야당을 협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문제가 많은 정부의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키려는 거짓말에 불과함.
- 문제투성이의 기초연금법 제정을 하지 않고, 민주당 주장처럼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하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20

만의 기초연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음.

- 즉, 7월부터 20만원을 지급하는 데에는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가 없고, 별도의 예산도 필요치 않음. 정부와 여당이 문제투성이 기초연금법을 고집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임
- 결론적으로, 우리 민주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별지급 하는 새로운 법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이 현행법에 따라 차별 없이 20만원을 지급하자고 요구하는 것임.

정부의 기초연금법이 개악인 이유 4가지!!

1.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로 성실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2. 공적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근간 위협
3. 물가상승률과 연계, 5년 마다 조정하더라도 국민은 손해
4. 현행법상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훼손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려는 아집을 버려야!

□ 국민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 추이

	기초연금 대상노인(70%)	무연금자 (전액)	국민연금 수급자(A)	감액 대 상 자		
				국민연금 수급자 중 감액대상자(B)	무연금자 중 감액대상자	((B)/(A)×100)
2014년*	3,910	2,920 (74.7%)	880 (22.5%)	270 (6.9%)	110 (2.8%)	30.7%
2020년	5,658	4,067 (71.8%)	1,591 (28.1%)	803 (14.2%)	28 (0.5%)	50.5%
2030년	8,884	5,819 (65.5%)	3,065 (34.5%)	1,661 (18.7%)	44 (0.5%)	54.2%
2040년	11,551	5,712 (49.4%)	5,830 (50.5%)	3,488 (30.2%)	58 (0.5%)	59.8%
2050년	12,594	4,118 (32.7%)	8,476 (67.3%)	5,478 (43.5%)	63 (0.5%)	64.6%
2060년	12,335	2,633 (21.3%)	9,702 (78.7%)	6,550 (53.1%)	62 (0.5%)	67.5%

* 2014년은 2012년12월 말 수급자 기준 / 단위 : 천명, %

□ 국민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 추이

	기초연금 대상노인 (70%)	무연금자 (전액)	국민연금 수급자(A)	감액 대상자		
				국민연금 수급자 중 감액대상자(B)	무연금자 중 감액대상자	((B)/(A)×100)
2014년*	3,910	2,920 (74.7%)	880 (22.5%)	270 (6.9%)	110 (2.8%)	30.7%
2020년	5,658	4,067 (71.9%)	1,591 (28.1%)	882 (5.5%)	28 (0.5%)	50.5%
2030년	8,884	5,814 (65.3%)	2,970 (33.7%)	1,614 (5.4%)	24 (0.5%)	54.2%
2040년	11,551	5,712 (49.4%)	5,830 (50.5%)	3,488 (30.2%)	58 (0.5%)	59.8%
2050년	12,594	4,118 (32.7%)	8,476 (67.3%)	5,478 (64.6%)	63 (0.5%)	64.6%
2060년	12,335	2,618 (21.2%)	9,717 (78.8%)	6,572 (67.5%)	2 (0.02%)	67.5%

* 2014년은 2012년12월 말 수급자 기준 / 단위 : 천명, %

2020년,
절반이 넘는 50.5%

2060년,
약 10명 중 7명 (67.5%)

□ 주요선진국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비교

구분	일본('06)		미국('07) (비례)	독일('08) (비례)	영국('10) (기초)	캐나다('08) (기초+비례)	대한민국
	기초	후생					
이론적 대체율 ¹⁾ (A)	20.0	42.0	40.0	43.5	15.0	40.0	40.0
실수급자 대체율 ²⁾ (B)	16.5	37.5	33.1	28.8	13.0	28.2	22.7
B/A	82.5	89.3	82.8	66.2	86.7	70.5	56.8%

주) 1) 모두 40년의 완전가입을 전제로 한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
2) 전가입자 평균소득월액 대비 기준수급자의 월평균연금액의 비율

□ 전체 국민연금수급자의 연도별 평균 실질 소득대체율 추이



□ 기초연금액 물가 연계하고 5년마다 조정해도 손해!

- 정부 제출 자료(A값의 10%와 '물가상승률 + 5년 보정' 비교자료)를 보면,
- 2015년~2018년 5천원~3만4천원 적게 받음 -> 2019년 재평가를 통해 A값의 10%로 금액동일 -> 2020년~2023년 1만원~4만5천원 적게 받음. -> 2024년 재평가 통해 다시 동일 -> 2025~2028년 1만3천원~5만8천원 적게 받음.
- 이런 과정 반복되어, 2055년~2058년 사이에는 최대 13만 3천원 적게 받는 개악!

□ 현행법상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개악

<기초연금 수급자중 20만원(A값의 10%) 전액을 받지 못하는 감액대상자>

2014년 9.7% → 2020년 14.7% → 2030년 19.2%

→ 2040년 30.7% → 2060년 53.6%

<기초노령연금법 부칙(2007.4.25일) 제 4조의 2>

제4조의2 (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금액
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한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소요재정 현황

	2014~2017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정부안(국민연금 연계)	39.6	17.2	49.3	99.8	159.5	228.0
정부안+75%	42.3	18.4	52.7	106.8	170.8	244.3
70% 20만원	40.7	17.8	53.6	111.6	182.3	263.8
기초노령연금	26.9	13.7	53.6	111.6	182.3	263.8

단위 : 조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당 보건복지상임위원회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박근혜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발행일 2014. 03. 12